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0.4. (제3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제3호

본지는 연 2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지입니다.

발행	2020년 4월 8일
발행인	김진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편집인	박세현(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장)
편집위원장	문성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태중(충남대학교)
	성형권(영남대학교)
	이성춘(송원대학교)
	장광열(국방대학교)
	최규상(강릉원주대학교)
	최윤철(상명대학교)
편집간사	문근형(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발행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전화	02-499-0201
팩스	02-417-5527
이메일	korvass0201@naver.com

ISSN 2672-040X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재향군인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논문내용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http://www.korva.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경과 소고 문근형	1
❖ 방위비 분담 갈등을 통해 본 한미동맹 발전 방안 김승택	35
❖ 북한 SLBM 위협실태와 전략적 의도 분석 방호엽	63
❖ 임진왜란기 용인 전투에서 참패(慘敗)한 이광(李洸)의 전투지휘능력 - 손자병법의 五事를 중심으로 - 이영석	93
❖ 북핵 대응전략의 평가 및 전망 박상중 외	125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경과 소고

문근형*

- I. 서 언
 - II. 추모의미 고찰과 현상
 - III. ‘추모의 벽’ 건립 추진배경 및 경과
 - IV. 보훈선양정책 분석 및 평가
 - V.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간 제언
 - VI. 결 언
- 별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mhj6442@naver.com

논문요약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 속에 이어져 오고 있다. 수많은 역사의 전쟁 중에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금까지 가장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전쟁이다. 아직 생생하게 노병들의 기억 속에는 치열한 전쟁으로 남아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전투병력과 물자, 의로지원을 아낌없이 한국을 지원하였다. 그들의 도움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큰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고 무너진 전쟁의 흙더미 속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눈물과 땀을 쏟아 부어야만 하였다. 이제 미래 세대에게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과 유엔참전군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를 한국 뿐 아니라 많은 참전국들이 보유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한국전쟁 기념 장소에서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공원에 특별한 '추모의 벽' 건립을 앞두고 있다. 추모의 벽 건립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을 도와주었던 참전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향후 미국 한국전참전공원에 '추모의 벽' 건립과 함께 일부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 잡고 아직 한국전 기념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탈리아와 인도에도 한국전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훈할 수 있는 장소가 건립되는 등 보훈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추모의 벽, 한국전, 전사자, 한미동맹

I. 서 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고대로 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크고 작게 인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는 ‘과거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잊지 않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달할 내용과 매개체를 만들어야 한다.’¹⁾는 생각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박물관과 기념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경험과 학습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념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 대상을 방문객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 공간으로 형성되는 것이다.²⁾ 이는 곧 ‘기억’과 ‘추모’와 깊은 연관이 있다. ‘기억’은 ‘누구를’,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가 소중하다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영상에 미래의 기대를 투영하기 때문이다. ‘추모’는 ‘누구를’에 비중이 더 높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 어떤 점을 특별히 기억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추모하는 공간에서는 긍정적 업적과 인물, 위로받을 인물 등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 중에서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면서 3년 전쟁기간을 통하여 수많은 전사상자와 이산가족, 물적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다.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분단 후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라는 수식어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1950년 당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우방국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 한국에 16개국의 전투병력과 5개국의 의료지원이 결정되면서 유엔국 21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준 것이다.

1) 김유나, “용산 전쟁기념과 해외파병실 전시 분석”, 서울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2017), p. 4.

2) ibid., p. 19.

전쟁 후 약 70여년의 기간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감소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베이비 붐 세대들과 신세대들은 그 당시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다.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찬란한 현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각처에 설립된 기념비와 기념관, 역사관 등을 통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기념비는 과거 기념해야 할 사항을 상징하는 조형을 건립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감격을 느끼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념물을 남겨놓으려는 의지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존재하였으며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고 언급하기 어렵듯이 세계 각처에는 전쟁관련 기념비가 어디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이나 회상은 개인과 집단의 현재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우리는 6·25전쟁과 같은 아픔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한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방국들과의 혈맹 정신과 가치는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을 통해 시작된 혈맹을 이제 포괄적 전략동맹,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유엔군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주변국의 안보 위협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국을 도와주었던 많은 국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로 그들의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국가 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희생을 오랫동안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전쟁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와 건축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던 참전국가에 한국전쟁 참전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한국전쟁은 쉽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가의 한국전쟁 기념 장소 중에서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공원에 특별한 ‘추모의 벽’ 건립을 앞두고 있다.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경과를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항을 평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다. 재향군인회에서 ‘추모의 벽’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혈맹관계인 한미동맹과

함께 한국을 도와주었던 참전국에 미력하나마 그들의 고마운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순국선열 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세계 각처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기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되는 그분들의 희생을 감사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였다. 사례는 한국과 유엔군 참전국에서 추모활동을 한 사례를 인터넷과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II. 추모의미 고찰과 현상

1.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되었다.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뻔 하였으나,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반공 양강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열전으로 폭발한 대표적 사례로, 냉전(冷戰)인 동시에 실전(實戰)이었으며, 국부전(局部戰)인 동시에 전면전(全面戰)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졌다. 이는 국제연합군과 의료진을 비롯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까지 관여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었다.

중국 마오쩌둥과 소비에트 연방 이오시프 스탈린의 협조와 지지를 얻은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과 동해안 등 11개소에서 경계를 넘어 38선 이남으로 진격하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국은 트루먼이 6월 30일 미 극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 목표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맥아더는 주일 미 8군 사령관 월터 워커 중장에게 “24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육군 주일 미 8군 24사단 21연대 1대대 스미스 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상륙하였다.

조선인민군의 대공세에 유엔은 미국을 주축으로 바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를 의결하고 이 전쟁에서 한국을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파병하였다. 1950년 7월 1일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와 유엔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단일 지휘 아래 둔다”는 공동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7월 7일 7대1(기권3)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벨기에·캐나다·콜롬비아·프랑스·그리스 왕국·에티오피아 제국·룩셈부르크·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태국·터키·영국·남아프리카 연방 등 16개국 군대로 유엔군이 편성되었다.

그리하여 7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되었다. 유엔군의 조직과 투입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세는 매우 어려웠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탱크를 저지할 무기가 없어 대구,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앞에 있었다. 하지만 연합군은 더글러스 맥아더의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10월 10일 평양에 이어 압록강 부근까지 이르렀다. 11월 중순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하여 전세가 뒤집히고 해산진까지 진격하던 국군은 1월 4일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다. 다시 3월 15일 탈환 등 이후 3년 간 지속된 전투로 수많은 사상자와 산업 시설 파괴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22시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한국전쟁은 국제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전쟁을 치루게 되었다.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하 들어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거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많은 희생과 함께 유엔군의 값진 희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보답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은 유엔군 전투부대 참전현황과 의료지원현황이다. 연인원 약 196만 명이 참전하였으며 그중 미국이 179만 여명으로 큰 전쟁이었다. 여기에다가 중국인민지원군과 소련의 참전현황까지 고려한다면 2차 대전 이후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 중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엔군 전투부대 참전현황/의료지원 현황

국 가(전투부대)	참전 연인원(명)	참전규모		
		육군	해군	공군
미 국	1,789,000	302,483	극동 해군 미7함대	극동 공군
영 국	56,000	14,198	함정 17척	
오스트레일리아	17,164	2,282	항모 1척,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전투비행대대 수송기 편대
네덜란드	5,322	819	구축함 1척	
캐나다	26,791	6,146	구축함 3척	수송기 대대
뉴질랜드	3,794	1,389	프리깃함 1척	
프랑스	3,421	1,185	구축함 1척	
필리핀	7,420	1,496		
터키	21,212	5,455		
태국	6,326	2,274	프리깃함 7척 수송선 1척	수송기 편대
그리스	4,992	1,263		수송기 편대
남아프리카공화국	826			전투비행대대
벨기에	3,498	900		
룩셈부르크	100	48		
콜롬비아	5,100	1,068	프리깃함 1척	
이티오피아	3,518	1,271		
국 가(의료지원)	참전 연인원(명)	근무인원 (명)	지원부대 및 시설	
노르웨이	623	109	이동외과병원	
인도	627	333	제60야전병원	
스웨덴	1,124	170	적십자병원	
덴마크	630	100	병원선	
이탈리아	128	72	제68적십자병원	

출처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282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사한 외국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3시 20분 미군 하사관 한 명이 한국전선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가 바로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사자였다.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 대표가 판문점에서 휴전 문서에 서명하기 약 8시간 전 판문점에서 24km 떨어진 미해병대 야전병원에서는 군의관들과 간호병들이 한 부상병을 긴급히 치료하고 있었다. 부상병은 22세 해병 하사였다. 그는 전날 밤 중공군이 쏜 박격포탄에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고 앰블런스에 실려 이 야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군의관들은 피를 많이 흘린 그에게 다량의 피를 수혈하고 3명의 군의관이 5시간 동안 필사적 노력을 다했으나 이 해병하사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때가 1953년 7월27일 오전 3시20분. 오전 10시로 예정된 휴전조인을 겨우 6시간 40분 앞둔 시점이었다.³⁾ 당시 TIME지 보도에 의하면, “해병 위생병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해병 하사의 시신을 하얀 천으로 덮은 다음 자리를 떴고 백열전등 하나만이 외로이 한국전쟁 마지막 전사자의 시신을 밝혀주고 있었다”고 전하였다.

2. 추모 용어의 정의

추모(追慕)의 사전적 의미로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 함’이다. 최근에는 “어떠한 기억이나 행위, 역사적 사실 등, 여러 포괄적인 추상적, 혹은 구체적 대상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의미”⁴⁾로도 사용되어 지고 있다. 추모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마음이다.

이와 함께 ‘기념’의 의미를 알아본다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기념’과 ‘기억’은 따라 다니는 단어이다.⁵⁾ 메모리얼의 사전적 의미는 ‘기념비 적인 것’,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뜻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기억하고 추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3) 조화유, “한국전쟁 중 미군 전사자 5만4천260명...이중 최후의 전사자는 누구?”, 『pub. chosun.com』, 2016. 07. 27.

4) 현자연, “체험적 기법을 통한 위안부 추모관 설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2016), p. 3.

5) 서희정, “메모리얼에서 집단기억 특성과 공간 연출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2018), p.1.

추모의 공간이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이나 건축물, 자료나 유품 등을 진열하여 두는 곳”을 의미한다. 기념이라 함은 공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기억하는 것과,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도와준다. 이것은 기념, 혹은 애도하고 추모할만한 대상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가 아니어도 그 기억과 사실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발전과 영향을 끼친다.⁷⁾

각종 기념비는 각 기념비에 맞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야 한다. 추모의 공간은 기념관과 기념탑, 기념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념비적 건축물은 강한 상징성과 조형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2> 기념비적 건축의 상징성

상징성	내 용
기억의 보존	- 메모리얼 공간은 추모와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기억의 보존 - 기억은 어떤 이미지 안에서 구성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억에 대한 보존이 기념비적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념의 역할	- 고대로부터 인류는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고자 노력. 사(死)의 기념, 전쟁기념, 경축기념, 종교적 기념처럼 무언가를 기념하고자, 기념비와 같은 오브제를 세우고, 능묘를 만들고, 더 나아가 추념의 용기로서 기념관과 같은 건물들을 지어 왔고, 기념주체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대개의 경우는 연속성을 지님
시간적 초월성	- 메모리얼이란 말이 ‘영구적 가치가 있는’, ‘불후의’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기념비적 건축은 시간적 초월성을 지님.

출처 : 임화경, “영화의 내러티브 구성기법을 적용한 메모리얼 공간디자인 연구”, 이화대 석사논문(2008), pp.22-23.

6) 서희정(2018), p. 5.

7) 송경옥,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사논문(2007), p. 82.

기념비의 의미속에는 인물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며, 역사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상과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기념비는 먼저, 기억의 장소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애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묵념의 장소로 개인이나 집단의 숙고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모의 벽은 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⁸⁾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전쟁과 유엔군의 참전, 그리고 값비싼 희생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기억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추모와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행사는 무엇보다 값질 것이다.

3. 한국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기념비 및 기념활동 현황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여러나라의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부산에 유엔기념공원이 지어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은 1951년 1월 18일 설립되었으며 면적은 144,902㎡(약 45,000평)이다. 등록문화재 제359호(2007년 10월 24일 지정)로 유엔 기념 공원(영어: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한자: 유엔記念公園)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유엔군 묘지이다. 유엔군 사령부에 의하여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등지에 있었던 6개소의 묘지로부터 유해가 이장되어 설치된 것이다. 이곳에는 영국(885), 오스트레일리아(281), 캐나다(378), 프랑스(44), 네덜란드(117), 뉴질랜드(34), 남아프리카공화국(11), 터키(462), 미국(36), 대한민국(36) 그리고 무명용사(4), 비전투원(11) 등 2,300용사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951년부터 전쟁 직후인 1954년 사이 유엔군 전사자 약 11,000여명의 유해가 안장되기도 하였으나 벨기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필리핀, 태국, 미국인의 유해 대부분과 프랑스, 노르웨이인의 일부 유해가 그들의 조국으로 이장되었다.⁹⁾

8) 임화경(2007), pp. 26~30.

9) http://www.unmck.or.kr/index_kor.php(검색일 19. 8. 20)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준 유엔참전국들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이 2014년 건립되었다. 최초 2005년 10월 28일 김정훈 국회의원에 의해 평화 박물관 건립 제기가 있고 난 후 2010년 부지확보 후 설계과정을 거쳐 2014년 11월 11일 개관식이 이루어졌다. 최근 2019년 03월 07일 국가기념관 스마트 전시체계 구축하고 모바일 앱 오픈 및 가상현실체험존 조성 등 계속적인 활동 중이다.¹⁰⁾

유엔평화기념관은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에게 전쟁의 참상과 정전협정의 무게를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적 공간으로, 참전자들의 희생을 골고루 전달하는 감사의 공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UN군 참전용사와 국가의 명예선양을 위해 자료조사와 전시, 출판(발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유지를 위한 희생과 의지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주축으로 평화의 연대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다. 유엔평화문화특구와 함께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명소로, 기념관을 통해 이 땅의 젊은 이들이 국경을 넘는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UN의 결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념관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전개와 인적자원 육성을 목표로 유엔기념공원 및 유엔평화문화특구를 통해 한국의 UN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활동의 제고, 공적 개발 원조 및 새천년 발전 목표의 증진, 녹색성장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증진 등 UN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및 활동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정부행사의 일환으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고 공헌을 기리는 정부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 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1946호)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공산화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군

10) <http://www.unpm.or.kr>(검색일 2019.8.19)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기념일 제정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UN참전용사와 UN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동맹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며, 전후세대에게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다. 2019년에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은 16개국의 유엔군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6·25전쟁 참전국들의 활동상과 국가별 유물 및 기증유물 등을 관람하기 위해 기념관 방문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한국에 있는 유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는 나라와 위치를 별지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념비에는 경기 오산시에 유엔군 초전기념비가 있다. 이는 스미스부대의 북한과의 최초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55년 7월 5일 미군과 24사단 장병에 의해 세워졌다. 그 외에도 병과별·군별 참전을 기념하는 장소도 많은 곳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국가별 기념비를 종합하였다. 참고적으로 한국에는 한국전쟁관련 기념비(탑) 등 건축물은 총 848개가 있다.¹¹⁾ 여기에는 유엔군 참전비가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 및 희생자 추모를 선양한 참전기념비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하여 건립된 기념비이다. 의료지원국 5개 국가 중에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2개국에 대한 기념비는 별도로 있으며, 그 외는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로 통합하여 건립되어 있다. 자세한 한국에 있는 유엔군 참전 기념비 현황은 별지에 제시 하였다.

4. 외국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기념비 현황

유엔군 참전국가별로도 참전 기념비를 세우고 한국전쟁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통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있으며 해당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전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기념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가 2013년 11월 8일에 제막식을 가졌다.¹²⁾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두 번째 많은 전투병력을 파견한 영국의 수도 런던에 참전기념비가 세워졌다. 영국은

11) <http://www.mpva.go.kr>(2019. 8. 26 검색)

12) 권경성, “노르웨이드 오슬로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한국일보』, 2013. 11. 7

2011년부터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기금마련에 한·영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 등 60여 곳에서 참가하였다. 5.8미터 첩탑 앞에 한국전 당시 전우들을 추모하는 영국군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¹³⁾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먼저 한국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준 나라로, 국립묘지에 한국전쟁기념탑이 있으며, 마닐라에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또한, 필리핀 정부에서 무상제공 부지(5000㎡, 1512평)에 한국정부가 11억 9천만 원을 들여 2010년 말에 완공하였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회(VOKS)는 한국전 참전부대인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내 참전기념비에 설치하였다.

뉴질랜드 참전비는 한국석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벨기에는 수도인 브뤼셀에 있고, 룩셈부르크 참전비는 헌법광장에 위치하면서 황금여신상으로 불리우며 전사한 동료를 애도하는 조형물의 형태이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6·25 참전국으로 참전비가 콜롬비아 수도 산타페 데 보고타(Santa Fe de Bogota)시 해군본부 안에 1973년 5월 19일 세운 한국전 기념탑이 있고, 보고타 시에도 해군 한국참전비가 있다. 또한 보고타 국방부 안에도 2003년 3월 23일 콜롬비아 정부에서 건립한 한국전 기념비가 있다. 그리고 콜롬비아 북단 카리브 해에 임한 카르타헤나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물이 2008년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거북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 유르고덴 내 공원에서 2019년 6월 15일 준공한 기념비이다. 스웨덴은 그 전까지는 1996년 11월 4일 Helenlund 지역 스웨덴 경찰대학 내의 스웨덴 야전병원 한국전쟁 참전 기념패를 지니고 있었으며, 전쟁 참전자에 대한 감사의 문구와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다.

미국에는 가장 많은 기념비가 있는데 맨하탄에 있는 기념비는 배터리파크 내에 군인 형상의 구멍 뚫린 조각물이다. 2014년에는 미 서부 오리건 주에 한국전쟁 기념박물관이 2002년 조성된 6천 평 규모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안에 조성되었다. 2015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가 건립되어 미국에는 총 11개의 기념관(기념비)가 있다. 유엔참전국 21개국 중 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기념관(기념비)을 보유하고 있다.

13) “한국전 64년 만에 런던에 참전 기념비 상상도 못한 일”, 『YTN』, 2014. 12. 4

Ⅲ. ‘추모의 벽’ 건립 추진배경 및 경과

1. 한국전 기념공원

미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178만 여명의 장병이 한국 땅을 밟았고, 이 가운데 3만 6000여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 한국전참전용사협회에 따르면 이를 기념하기 위한 미국 내 한국전쟁 관련 기념물은 비석이나 벽, 건물, 기념공원 등의 형태로 40개 주에 100여 개에 달한다.¹⁴⁾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유엔국들은 각기 참전기념비를 세워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공원은 워싱턴 D.C. 서포트맥공원(West Potomac Park)에 있으며, 한 해 2천 5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여기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비(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는 1986년 10월 28일 미국의회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추모 조형물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9년 후인 6·25전쟁 정전 42주년을 맞아 1997년 7월 27일에 완공되었다. 1995년 제막식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참가하였다. 건립당시 1,800만 달러의 경비가 들어갔으며, 기념주화 판매 수입, 참전용사들의 소액 기부, 현대자동차, 삼성 등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1986년 공모전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의 디자인이 선정되었지만 베트남 전쟁 추모 조형물을 맡았던 쿠퍼 레키(Cooper-Lecky)사에서 건축을 진행하면서 일부 디자인이 수정되었다. 한국전참전기념비를 공중에서 보면, 19명의 참전용사가 삼각형의 한 꼭짓점을 향해 나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조각상은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가 디자인하였으며, 각 조각상은 2.21m부터 2.29m의 신장을 가졌고 약 500kg의 무게가 나간다. 14명은 육군병사, 3명은 미 해병대원, 해군과 공군 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UN벽(the United Nations Wall)에는 병사 19명의 동상이 반사되어 38명의 병사가 완성되고 38선을 의미하는 숫자 38이 만들어 진다. 원형으로 직경 9m의 얇은 연못으로 만들어진 회상의 연못(the Pool of

14) 조은정,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 “전쟁의 고통과 희생 기억”『VOA뉴스』(2017.6.6)

Remembrance)은 주변의 인디언 나무들의 가지와 태양이 반사되어 잔잔한 늪지대를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 졌다. 병사들의 동상 주변으로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꽃이 심어져 있고, 화강암 현판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가 새겨져 있다. 아마도 참전용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일 것이다. 이 노병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1950년에 준비가 안 돼 조국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 기념공원 인근 베트남전 기념공원에는 참전 미군 전사자 5만 8175명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 한국전참전기념비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국화(國花)인 무궁화가 심겨 있다. 주변이 화강암과 나무로 둘러싸여 지나치기 쉽지만, 한국을 그리워하는 참전용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1995년에 심은 무궁화 나무는 이제 큰 군락을 이루고 있다. 미군 참전용사들과 대한민국 국민, 한국과 미국을 마음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아닐까 싶다.

한국전참전기념비 앞에선 6·25 전쟁 추념식, 7·27 정전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한국 주요 인사들도 워싱턴을 방문하면, 한국전참전기념비에 들러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국 대학 및 고등학교 동문회도 수시로 이곳을 찾아 헌화한다. 그래서 한국전참전기념비에는 1년 내내 꽃과 화환이 놓여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모행렬은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생각도 바꿔놨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Thank you for your thanking”이라는 말을 건넨다. 미국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잊지 않고 찾아와 고맙다고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 자주 목격되는 광경 중 하나는 참전용사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고령이 된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 가치는 무엇이며, 젊은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교훈이 후세대에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있다.

2. 추모의 벽 추진 배경 및 과정

‘추모(追慕)’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에 참전해 팔다리를 잃었던 웨버 예비역대령과 주미무관부는 2015년과 2016년에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 미군 전사자 3만 6,000여 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000여명을 사흘에 걸쳐 우리말과 영어로 호명하는 행사를 하면서 추모의 벽 건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추모의 벽 관련 법안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공화당 샘 존슨 의원과 민주당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의원이 공동 발의해 2016년 2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공동발의자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 307명에 이른다. 이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후 9월 19일 다시 하원을 거치면서 최종 가결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10월 7일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H.R. 1475)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로써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기념공원에 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의 명단을 적어 넣어 그들을 그리며 생각하게 할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¹⁵⁾ 세워질 추모의 벽은 한국전 기념공원을 둘러싸는 대형 유리벽이다. 여기에는 미군 전사자의 이름과 함께 6·25전쟁에 참여했던 미군과 한국군, 카투사 장병, 연합군 사망자 수 등이 상세히 기록된다.

추모의 벽은 순수한 민간의 기금으로 건립된다. 법안이 미국 연방정부 예산을 추모의 벽 건립에 투입할 수 없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 기념사업법에 따르면 추모의 벽은 전체 사업비의 85% 이상의 기금이 조성돼야 착공 허가가 나온다. 추모의 벽 사업엔 2500만 달러(약 270억 원)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현지에서는 참전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특히 참전용사들이 90대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한분이라도 생존해 있을때 추모의 벽 건립을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추진과정에서 ‘추모의 벽’ 사업은 미 의회에서 2016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표명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따라 2016년 국회에서 ‘건립지원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업이었다. 한국정

15) 국가보훈처,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 건립된다”, 『나라사랑』, 2016.11.1

부 보훈처에서는 2017년 총 50억 원의 사업 예산을 책정했지만 2017년 전(前) 정권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벌인 뒤 보류시키기도 하는 순탄치 못한 과정도 있었다. 정부 예산 외에 별도로 110억 원의 기증을 약속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적폐'로 몰리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비판이 나오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기도 하였다.

추모의 벽 사업은 청와대가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부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추모의 벽 건립 의사를 밝혔다. 추모의 벽 사업이 이렇게 부활을 예고하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도 2018년 8월 28일 미국재향군인회(AL) 100차 총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참전비에 헌화하며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참전비와 인접해 있는 베트남전 기념공원과 비교하여 전사자들의 이름조차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해준 미군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약 500m 떨어진 베트남전참전비에는 전사자 5만 8천여 명의 이름이 연도별로 잘 새겨져 있는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재향군인회장이 그날 워싱턴 지회 회원과 리처드 딘 한국전참전기념재단 부회장에게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향군 차원에서 1억 원 모금운동을 전개할 뜻을 천명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프랑스가 선물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100년 넘게 미국과 프랑스의 우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추모의 벽”도 앞으로 수백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를 과시하는 기념물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모금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모금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향군 임직원, 회원, 군 및 보훈관련단체, 기업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6억 3천만 원을 모았다.

이제는 2022년을 목표로 이들의 이름을 새긴 유리로 만든 추모의벽 건립할 예정이다. 이 유리벽은 공원 내 추모의 못 주변에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유리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유리벽에는 전사한 미군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카투사 등 한국군의 희생도 기억될 것이다. 추모의 벽 건립은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보훈처에서도 2018년에 미국에 실사를 다녀왔고, 2020~2022년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 정부 때는 사업비 상당 부분을 민간 모

금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모금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하여 현 정부에서는 건립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하여 추진 중이다. 2019년 6월 현충일 추모식에서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완공을 약속함으로써 추모의 벽 건립 추진에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향군인회의 적극적인 동참 활동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끌어 가는 커다란 힘이 된 것이다. 향군의 안보활동 기조 중에 하나인 국가안보정책 지원에 포함되어 정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IV. 보훈선양정책 분석 및 평가

1. 국가보훈처 정책

보훈제도는 과거 선조시대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시작되어 6·25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어 6·25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전상자와 전사자의 유족 발생으로, 국토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훈정책은 사회적 문제도 부각되었다.

1960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되어 보상금지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의 경제성장이 밑거름이 되어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제도가 어느 정도 내실화 되었으며, 1984년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원호’개념을 ‘보훈’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보훈사업의 주무부처 명칭도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개칭하면서, 보훈사업이 단순한 구호사업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보훈정책 중에는 ‘물질적 보상정책’과 함께 ‘보훈정신 선양정책’이 같이 추진되었다.

보훈선양정책에는 ① 보훈기념행사 ② 국립묘지의 관리와 안장지원 ③ 현충시설의 관리와 보존·활용 ④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보훈선양정책의 개념으로 ‘선양(宣揚)’의 사전적 의미는 널리 떨치게 한다는 뜻이다. 보훈선양은 ‘국가에 대해 헌신과 희생을 하게 하였던 기본정신을 기림으로써 그 정신과 뜻을 받드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나라 위한 희생의 참가치를 알게 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도록 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면서 자긍심을 높여 주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 보훈선양정책은 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훈정책 중 하나가 추모의 벽 건립을 통한 보훈선양사업이 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관심 지역에 기념물을 설치한다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에 추모의 벽 건립을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달려왔던 참전국가들에게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했지만 보훈처 내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훈처가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기업과 2016년 5월 성금 모금 공동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부금품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한 채 사업 자체를 종료되는 등 예산부족으로 건립추진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¹⁶⁾

국외현충시설 건립사업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장이 사업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방안 등을 검토해 보훈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해 사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 연방 기념사업법은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85%가 사전 모금이 완료돼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국가 예산으로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면서, 정부 지원예산도 건립이 시작된 후 건립비로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보훈처는 2017년 10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 집행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담당 부처에 대해 국외 현충시설 건립 지원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¹⁷⁾ 2022년까지 ‘추모

16) “文대통령도 약속했는데…벽에 막힌 한국전 ‘추모의 벽’”, 『서울신문』, 2018. 9.4

17) 이주원, “文대통령도 약속했는데…벽에 막힌 한국전 ‘추모의 벽’”, 『서울신문』, 2018.9.5

의 벽'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018년에 사업비의 1.56%(4억여 원) 수준만 모금해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국외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설립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추진시에는 해당국가와 우리정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간 설립합의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추모의 벽' 건립에 대한 사항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국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하여 2020년 설계비 예산 20억을 지원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가 산출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예산지원 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순조롭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

2. 재향군인회 정책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애국·명예단체로,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52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1963년 7월 19일에 법률 제1367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기본으로 향군은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직업안정 및 권익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 7. 자유민주주의 수호, 8. 국가 안전보장과 민족 평화통일에 기여, 9. 사회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향군에서는 12개의 안보활동기조를 수립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이다. '추모의 벽' 건립 모금을 위해 향군 정회원 1인당 1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것으로부터 2018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추모의 벽' 건립 모금은 김진호 향군회장이 2018년 8월 미국재향군인회 100차 총회 축하 연설 및 방미 활동 간 8월 29일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참전비와 베트남전 참전비를 헌화하면서 베트남참전비와는 달리 한국전참전비에는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한국전참전기념공원재단(KWVMF)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전참전기념공원재단에 따르면 추모의 벽 건립 예산

은 한화로 약 280억 원이나 현재까지 모금액은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6·25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¹⁸⁾ 모금활동은 미서부지회 간담회에서 최초 제안하여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임원 및 회원들이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5천달러(한화 약 560만 원)를 모금했으며, 김진호 회장도 자비로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 사업계획을 전해들은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2018년 10월 5일 금일봉을 보내왔으며 향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추모의 벽’ 건립에 향군이 앞장섬으로서 우리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70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들과 1953년 휴전 이후 한국군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350만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원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지난 70여 년 간 한국군과 미국군은 함께 싸우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승리한 세계 어느 동맹보다 굳건한 혈맹임”을 천명하였는데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 단체인 향군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모의 벽’ 건립 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향군회원은 약 1,000만 명이다. 뜻이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도 참여도 적극 유도하였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저 없이 전쟁터로 달려 나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자랑스러운 젊은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추모의 벽 건립에 향군이 앞장섬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79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350만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원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데 있다. ‘추모의 벽’ 건립 모금활동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 미국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많은 병력과 장비를 급파했다. 참전용

18) 오종택, “향군, 美 한국전참전기념공원내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운동”, 『NEWSIS』, 2018. 10. 18.

사들은 낮은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저 없이 전쟁터로 달려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용감히 싸우다 희생됐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전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과 1953년 휴전 이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장병이 350만 명이며 현재도 2만 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힘쓰고 있다. 이제 우리가 나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로 맺은 혈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휴전 이후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왔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V.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간 제언

제향군인회에서는 향군에서 추진하였던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2019년 7월 27일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미국 한국전참전용사 300명을 초청 위로연에서 전하였다. 향군의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에는 89개 단체, 22개 기업, 2만 8,577명이 참여하여 6월 말 기준 목표의 6배인 6억 3천여 만원을 모았다.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이 계승되고 전쟁영웅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성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을 앞장서 추진한 결과 ‘추모의 벽’이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여기에 미대사가 대독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추모의 벽’이 건립되면 역사적인 기념물로 후세에 남아 혈맹인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고 나아가 평화의 기념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모의 벽 건립 추진에 병행하여 연구간에 확인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3가지를 제안해 본다. 먼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발생한 전사자의 정확한 수에 대한 혼란이다. 한국전쟁 기념공원 바닥에 새겨진 글귀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rver met. 1950-1953”(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1950-1953)이다. 이와함께 기록된 것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54,246명의 젊은 목숨을 바쳤고, 103,28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아직도 8,176명의 실종자를 두고 있다는 내용을 바닥 비석에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군 5만 4천여명의 숫자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3만 7천 여명의 숫자와는 다르다. 미국에서도 많이 기록된 숫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국방성에서 확인한 숫자와 다르다. 미국 국방부 통계로는 한국전쟁 3년 동안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은 총 5만 4천 260명이었는데, 이 중 전사자는 3만 3천 574명, 질병, 사고에 의한 사망자 등은 2만 267명이었다고 한다. 미국뿐만아니라 각 참전국의 전사자 수를 국방부/전쟁기념관, 유엔기념관을 확인해본 결과 숫자가 일치하는 국가는 9개 국가이고 9개 국가는 최소 1명에서 113명까지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2015년에 현황을 최신화하여 사용중이다. UN기념공원에서는 해당국가 대사관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 국방부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식적인 현황을 확인할 때에는 국방부 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숫자는 국방부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 3>은 전쟁기념관과 UN기념공원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이다.

두 번째는 추모는 추모의 일정한 한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시대가 변화되면서 추모공간 밖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체계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가 발전되고 있는 현대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도 같이 개발되고 발전이 된다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한국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모의 벽 건립과 병행한 사이버 공간의 추모장소를 같이 추진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표 3> 유엔군 전사자 인명피해 현황

국 가	국방부/ 전쟁기념관	UN기념공원	차이
미 국	36,574	36,492	+82
영 국	1108	1,177	-69
오스트레일리아	340	346	-6
네덜란드	124	124	0
캐나다	516	516	0
뉴질랜드	45	41	+4
프랑스	269	270	-1
필리핀	113	120	-7
터키	892	1,005	-113
태국	136	136	0
그리스	187	186	+1
남아프리카공화국	37	37	0
벨기에	106	106	0
룩셈부르크	2	2	0
콜롬비아	213	213	0
이티오피아	122	122	0
노르웨이	3	3	0
인도	3		+3
계	40,790	40,896	-106
비 고	- 참전국가의 인명피해는 6·25전쟁 기간 동안(1950.6.25. ~1953.7.27)에 한반도내에서 발생한 피해 - 터키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종인원과 부상자, 비 전투사망자를 포함하여 차이 발생 -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 54,246명 * 국방부 최신자료는 2015년 자료임.		

출처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 283, 손규석, 조성훈, 김상원, 『6.25전쟁과 UN군』(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5), p. 502.

세 번째는 유엔참전국 21개국 중 이탈리아와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한국전쟁 기념관(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국방무관부를 통해 확인 결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는 따로 없으며 1989년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이남기 대사가 헌정한 현판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판의 크기는 약 세로 50cm, 가로 60cm로 강당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다른 참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념비와는 차이가 있다. 현판은 이탈리아 적십자 군사본부 Ferdinando Palasciano 대강당내에 위치하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탈리아 적십자 제68야전병원부대가 출정식을 한 장소이다. 현판으로서는 기념비의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는 2019년 2월 22일 문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시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 한국전 참전 기념지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¹⁹⁾라고 언급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국가임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선양사업이 커다란 국가상호간의 협력으로 이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전 참전기념비가 아직 없는 이탈리아와 인도에 협력하여 이곳에도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이 별도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국가위상 확립과 함께 한국전에서 희생한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제언을 통하여 한국전 참전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교류와 협력이 원활히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도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 “문대통령 한·인도 국방협력 강화...CEPA 개선협상 조속 매듭”, 『매일경제』 2019. 2. 22

VI. 결 언

과거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전쟁기간 중 인적피해로 한국 국군 137,899명 유엔군 40,790명의 전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990,968명, 경찰 3,131명 등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이 누리는 평화가 더욱 값지고 빛나는 것이다. 이들의 희생은 영원히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선열들과 조국을 떠나와 떠나면 이국땅에서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그들의 희생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 세계 10위권 내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그들의 희생에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선열들과 유엔참전용사들의 염원을 이어받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앞으로 전쟁의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금번에 추진한 ‘추모의 벽’ 건립 모금 기금 활동은 미국에서 2016년 건립법이 통과하고 난 후에 정부차원에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을 시기에 적시적절하게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2022년이 되면 ‘추모의 벽’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사업의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기회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중에 전사한 유엔참전국의 명확한 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사이버 추모공간도 ‘추모의 벽’ 건립과 함께 구축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추모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아직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도와 이탈리아에도 정부 혹은 민간 차원의 도움으로 기념비를 건축하여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희생한 그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많은 참담함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전쟁은 철저한 대비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또한 새로 건립될 추모의 벽을 통해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뿐 아니라 유엔참전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논문투고일 : 2019.09.19]

[논문심사일 : 2019.10.15]

[논문수정일 : 2019.10.31]

[게재확정일 : 2020.03.06]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김유나, “용산 전쟁기념과 해외파병실 전시 분석”, 서울교육대학 석사학위 논문, 2017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서희정, “메모리얼에서 집단기억 특성과 공간 연출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18
- 송경옥,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사논문, 2007
- 임화경, “영화의 내러티브 구성기법을 적용한 메모리얼 공간디자인 연구”, 이화대 석사학위 논문, 2008
- 현자연, “체험적 기법을 통한 위안부 추모관 설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6

2. 기타

- <http://www.unpm.or.kr>(검색일 2019.8.19)
- http://www.unmck.or.kr/index_kor.php(검색일 19. 8. 20)
- 조화유, “한국전쟁 중 미군 전사자 5만4천260명”, 『pub. chosun.com』, 2016. 07. 27.
- <http://www.panmunjomtour.com>(검색일 19. 8. 20)
- <http://www.konas.net>(검색일 19. 8. 20)
- 권경성, “노르웨이도 오슬로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한국일보』, 2013. 11. 7
- “한국전 64년 만에 런던에 참전 기념비 상상도 못한 일”, 『YTN』, 2014. 12. 4
- 조은정,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 『VOA뉴스』(2017.6.6)
- 국가보훈처,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 건립된다”, 『나라사랑』, 2016.11.1
- “文대통령도 약속했는데…벽에 막힌 한국전 ‘추모의 벽’”, 『서울신문』, 2018. 9.4
- 이주원, “文대통령도 약속했는데…벽에 막힌 한국전 ‘추모의 벽’”, 『서울신문』, 2018.9.5
- 오종택, “향군, 美 한국전참전기념공원내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운동”, 『NEWSIS』, 2018. 10. 18.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2017. 12. 18)
- “문대통령 한·인도 국방협력 강화...CEPA 개선협상 조속 매듭”, 『매일경제』 2019. 2. 22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of Memorial for the Korean War

Moon GeunHyeong

The history of mankind has continued in battles and wars, big and small. Of the numerous wars in history, the Korean War was the biggest war of human lives and property damage to date right after World War II. It still remains a fierce war in the memory of the old soldiers. When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on June 25, 1950, many countries generously provided combat troops, supplies and medical aid to Korea in order to protect Korea's freedom throughout the world without hesitation. Had it not been for their help and sacrifice, the present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disappeared from the earth.

Through the war, it brought so much human, physical and spiritual damage that it had to pour out a lot of tears and sweat to get out of the rubble of the fallen war. Now, we should never repeat the same pain as the Korean War to future generations. To this end, we should not forget the memory of the past and the spirit of memory and appreciation for the U.N. war troops, who spared no sacrifice to protect freedom in the Republic of Korea.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many other countries have places to remember and remember these Korean War. Many countries are also set to build a special "wall of mourning" at a Korean War park in Washington, U.S. While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wall, we thanke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at helped Korea and wrote the eagle in the hope that they will not forget their sacrifices and foster them in the It is hoped that future opportunities for veterans will be further expanded, with some erroneous data being revised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a "wall of memorials" at the Korean War Veterans' Park in the U.S. and places to remember the Korean War and contribute to their sacrifices in Italy and India, which do not yet have Korean War monuments.

Key Words : Wall of Remembrance, Korean War, Korean War, Korean War, Korea-U.S. Alliance
--

별지 #1) 한국에 있는 유엔군 참전 기념비(21개국 23개소)²⁰⁾

국 명	위 치
미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옥리 / 경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
영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영연방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묵동리
네덜란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뉴질랜드	경기도 가평군 북면 묵동리
프랑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터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태국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호국로
그리스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콜롬비아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에티오피아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의료지원단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노르웨이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스웨덴	부산진구 가야대로
이탈리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초전참전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0) <http://www.panmunjomtour.com>(검색일 19. 8. 20)

별지 #2) 외국에 있는 유엔군 참전 기념비(관)²¹⁾²²⁾

국 가	총 개소	세부내용
미 국	11	- 뉴욕 주 한국전 참전비 - 뉴욕 한국전 참전비 - 펜슬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 버팔로 한국전 참전비 - 서퍽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 아이젠하워파크 한국전 참전비 - 오논다가 카운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관 - 카유가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 컬럼비아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 키세나파크 한국전 참전비 - 화이트 헤이븐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캐나다	21	- 가평전투 참전 기념비(가평석) - 디에프파크 한국전 참전비 - 루넬버그 한국전 참전비 - 몬트리올 한국전 참전비 - 민토 한국전 참전비 - 브램튼 메도우베일 묘지 한국전 참전비 - 브룩사이드 묘지 한국전 참전비 - 빅토리아 한국전 참전비 - 샬럿타운 한국전 참전비 - 오타와 원주민 참전군인 한국전 참전비 - 오타와 한국전 전사자 기념비 - 오타와 한국전 참전비 - 위니펙 가평전투공원(가평석) - 윈저 한국전 참전비 - 윈저, 에식스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 캐나다 가평전투 참전 기념비 - 캐나다 로열 22연대 한국전 참전비 - 캐나다 보병연대 박물관 한국전쟁관 - 켈거리 참전기념비 - 퀘벡 한국전 참전비 - 토론토 한국전 참전비
스웨덴	1	- 스톡홀름 한국전 참전비 * 경찰대학 외벽 야전병원 참전기념패

21) <http://www.panmunjomtour.com>(검색일 19. 8. 20)

22) <http://www.mpva.go.kr>(검색일 19. 8. 26)

국 가	총 개소	세부내용
콜롬비아	4	- 보고타 한국전 기념비 - 카르타헤나 한국전 참전 기념비 - 콜롬비아 국방부 한국전 기념비 - 한국전참전전사자 추모석
태국	3	- 방콕 참전협회 한국전 참전비 - 촌부리 한국전 참전비 - 한국전쟁기념관
필리핀	5	- 마닐라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 마닐라 리잘파크 한국전 참전 기념비 - 마닐라 마리키나 시 한국전 참전비 - 필리핀 통합사관학교 한국전 참전비 -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관
영 국	11	- 노스웨스트웨일즈 한국전 참전비 - 더비 한국전 참전비 -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 - 맨체스터 한국전 참전비 - 벨파스트 한국전 참전비 -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기념관 - 아일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 - 영국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 입스위치 한국전 참전비 - 폴체스터 한국전 참전비 -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아치
벨기에	12	- 국립대성심성당 한국전 참전 기념물 - 글린 한국전 참전비 - 나뮈르 한국전 참전비 - 덱스워드 한국전 참전비 - 리에주 한국전 참전비 - 림뷔르흐 한국전 참전기념비 - 신트-니콜라스 한국전 참전비 - 아테르 한국전 참전비 - 오스트말러 한국전 참전비 - 월루웨 쌍피에르 한국전 참전비 - 카미나 한국전 기념비 - 티엘렌 한국전 참전비
그리스	2	- 테살로니키 한국전 참전기념탑 - 파파고스 한국전 참전비

국 가	총 개소	세부내용
프랑스	6	- 개선문 광장 한국전 참전 기념비 - 로자휴 한국전 참전비 - 르망 제2해병보병연대 한국전 참전비 - 생제르망앙레 한국전 참전비 - 오피탈-캥프루 한국전 참전비 - 파리 한국전 참전비
네덜란드	5	- 로테르담 한국전 참전비 - 엔젤브렛 반 나소 병영 한국전 참전비 - 오렌지부대 한국전 참전비 - 위트레흐트 한국전 참전비 - 티멘스 군목 추모비
룩셈부르크	2	- 룩셈부르크 국립 군사박물관 한국전쟁관 - 룩셈부르크 헌법광장 한국전 참전비
터키	4	- 볼레부르가즈 한국전 참전기념탑 - 이스켄데룬 한국전 참전비 - 터키군사박물관 내 한국전 전시관 - 한국 참전 토이기 기념탑
남아프리카공화국	3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박물관 한국전쟁관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본부 한국전 참전비 - 케이프타운 한국전 참전비
이티오피아	1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탑
뉴질랜드	5	- 오클랜드 한국전 참전비 - 오타키 초등학교 한국전 참전비 - 왕가누이 한국전 참전비 - 웰링턴 아오테아 한국전 참전비 - 타이하페 참전용사 추모비
오스트레일리아	7	- 멜버른 전쟁기념관 추모 공원 - 멜버른 한국전 참전 기념비 - 시드니 한국전 참전비 - 울버스턴 안자크파크 참전비 - 퀸즈랜드 한국전 참전비 - 태즈메이니아 군사박물관 한국전 참전비 - 호주 국립 전쟁기념관 한국전 참전비
노르웨이	1	- 노르웨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
덴마크	1	-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한국전 참전비
계	총 21개국 104개소	

방위비 분담 갈등을 통해 본 한미동맹 발전 방안

김승택 *

- I. 서 론
 - II.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한국의 분담 경과
 - III. 한미 방위비 분담 갈등의 원인
 - IV.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
 - V. 결 론
-

논문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로 한미동맹이 갈등을 겪고 있다. 동맹은 상호신뢰가 생명인데 동맹비용 분담을 두고 갈등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지속과 발전에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냉전종식으로 공통의 위협이 소멸되었다. 위협이 사라진 동맹은 동맹유지 비용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재정 압박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진배치 군사력은 유지할 수밖에 없고, 대안은 피주둔국에 주둔비용을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셋째, 냉전종식으로 세계의 경찰역할 수행에 흥미를 잃은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세계문제에 개입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필요하면 합당한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다.

변화한 동맹환경으로 볼 때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한미동맹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동맹이 상황과 환경에 부합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첫째, 동맹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재정의된 동맹의 성격에 따라 한미 군사관계의 구조도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조직과 제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려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양국 모두의 국익에 유리하다면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동맹강화를 위한 재조정 작업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비용분담, 노력 분담,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주한미군, 상호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 주둔비용, 한미동맹 강화.

I. 서론

2019년 10월 18일 한국진보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침입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대학생들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한국내 미국 정부시설 점거를 시도한 일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서울의 중심지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용산 미군기지와 같은 한국내 미군시설 점거 시도는 없었다. 그 만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요구가 대학생들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군사동맹은 공통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행동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 또는 협력관계의 한 형태이며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공동의 군사행동을 위해서는 군사비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위에 대한 기여도, 한미동맹 정신, 다른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수준, 한국의 경제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미간 협의를 거쳐 분담규모를 결정하여왔다. 그동안 한미간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그다지 큰 불협화음은 나오지 않았다. 양측 공히 동맹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타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한미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2019년) 분담금으로 대략 9억달러(1조 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도(2020년) 분담금 규모를 작년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야말로 폭증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급격한 증액이다. 한미간 협상결과에 따라 분담금 규모는 결정되겠지만 이번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동맹 파열음의 한국내 정치·사회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동맹의 목적에서 볼 때 동맹의 비용분담을 놓고 동맹국 사이에 갈등을 노정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유지

와 발전을 위해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6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동맹의 긴밀도나 결속강도는 예전 같지 않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반미시위가 거의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 양국사이의 동맹현안을 두고 한국사회의 반미감정 표출은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존중은 그에 걸맞게 향상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국민적 자존심의 손상,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반감 등 그 현상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한국내 반미감정 또는 반미현상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동맹의 건강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때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주둔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이견과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에는 기지폐쇄와 전면 철수라는 양측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했던 필리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¹⁾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최근 불거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방위비 분담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 경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한미간 방위비 분담 갈등의 원인을 군사,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한국의 분담 경과

1. 방위비 분담의 개념

‘방위비 분담’이란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인력, 물자, 경제적 제 비용을 국가간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²⁾ 방위비 분

1) 미국은 필리핀 정부와의 주둔비용 협상이 결렬되자 1992년 태평양지역 최고의 전략요충이라 평가되었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를 폐쇄하고 철수하였다.

2) 권철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 설정』, 정책보고서(서울: 국방대학교,

담은 협의로는 동맹국간의 공동방위를 위한 군사적 비용의 분담(cost-sharing)으로서 군사비 규모, 주둔군의 경비지원, 연합방위 예산의 분담 등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노력의 분담(burden-sharing)으로서 군사, 정치, 경제, 인권, 난민구호 등 제 분야의 협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³⁾ 군사적 비용의 분담, 즉 주둔군대의 주둔 비용에 대한 ‘비용분담’은 피주둔국가의 예산에 반영되어 지원하는 ‘직접 비용 분담’과 공여된 자산 및 지원에 의한 기회비용 등 ‘간접비용 분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정책은 양자 합의에 따라 미군 주둔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즉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NPSC: non-personnel stationing cost)을 직접적으로 분담하는 비용분담(cost-sharing)과 별도로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분담하는 노력의 분담(burden-sharing) 방식의 양대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는 국제환경의 변화, 국내경제사정 및 국민 여론, 당사국의 이해관계 등 대상 동맹국의 안보적·정치적 환경의 특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은 최초 ‘비용분담’에 국한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점차 ‘노력의 분담’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대외 안보협력 정책의 기조로 설정되고 있다.

2. 한국의 방위비 분담 경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지원은 있었으며, 주로 인적지원 및 시설지원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약 2,000여명의 한국군 병력을 미군에 배속시켜줌으로써 인적지원을 하였고, 주한미군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유엔군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화 약 4억원 이상을 대여하여 주는 등 미군을 지원하였다.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방위비 분담의 역사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용

2000.9), p.5.

3) 국방부, 『방위비분담』(서울: 국방부, 1987), p.7.

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SOFA 제2조에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grant)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이 한국내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주로 과거부터 제공해오던 토지와 시설의 사용비용 등 간접비 성격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간접적인 비용분담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이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력 약화가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각각 1,500억 달러이상으로 넘어서게 되고, 급기야 1989년에는 2조 달러를 상회하는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막대한 재정 및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미 의회 및 국민여론은 미 정부의 예산 감축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해외주둔 미군 유지비가 1979년 90억 달러에서 1987년 12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에 미 의회는 재정적자를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 ‘재정적자 축소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의한 재정지출 감축의 첫 번째 주요대상은 국방비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본 것이다.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자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의 방위력과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역할 분담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와 안보지원에 힘입어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시켜 전반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 양국의 경제·군사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양상에 수반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 하원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위비 분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의 중요

성과 전력가치, 안정적 주둔여건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1991년부터 우방국들의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 한국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중 일부를 분담⁴⁾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즉 방위비 분담은 특별조치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SOFA 제2조에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1항에는 “시설과 구역의 사용 이외의 일체의 미군 유지경비는 미국이 자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SOFA 규정에 대한 예외조치로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방위비 분담금

연도	'91	'93	'95	'97	'99	'01	'03	'04
분담금 규모 (\$)	1.5억	2.2억	3.0억	3.63억	*3.39 억	4.44억	5.57억	6.16 억
연도	'05	'07	'09	'11	'13	'15	'17	'19
분담금 규모 (₩)	6,804억	7,255억	7,600억	8,125억	8,695억	9,320억	9,507억	1조 389억

*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IMF) 사태로 예외적으로 분담금 규모가 감소하였다.

'98년부터 일부 원화로 지급하였으나 편의상 달러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출처: 국방부 정책실 내부자료를 기초로 편집

한국은 1991년 1차 SMA협정을 체결하여 1.5억 달러를 부담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에 해당하는 3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4)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 89.

2004년에는 6.2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부터는 달러기준의 비용부담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여 부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6,804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9,602억원을 부담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8.2% 증액한 1조 389억원을 부담하였다.

SMA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항목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이다. 둘째, 막사,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비전투시설의 건축에 사용되는 군사건설비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신무기 배치에 필요한 시설건축 등에 사용되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이다. 넷째, 탄약저장, 철도, 차량, 항공기 정비 등 군수용역 및 물자에 사용되는 군수지원이다. 이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2008년까지 대부분의 소요가 충족되어 2009년부터는 ‘군사건설’ 항목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3가지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III. 한미 방위비 분담 갈등의 원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1차 SMA 협정을 체결한 1991년이래 2~5년을 주기로 지속되어 왔다. 그때마다 분담금의 규모와 관련하여 한미간 갈등은 항상 있어왔다. 분담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작은 폭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지원을 받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큰 폭의 인상을 위해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최초 방위비 분담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을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안정적 주둔여건의 보장을 위한 선의(善意) 정도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분담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한국의 재정적 능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자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한미관계의 갈등요인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여 지난해(2019년) 분담금은 전년대비 8.2% 증액하여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1조 389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증액압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도(2020년)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5배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

하고 나서 한미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의 증폭은 한미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가뜰이나 동맹의 긴밀도 약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미동맹에 있어 그동안 비교적 동맹에 호의적이었던 한국 국민들조차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미국의 행태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문제의 출발이 트럼프였을 뿐 방위비 분담관련 갈등은 동맹의 기능과 역할 등 동맹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즉, 방위비 분담이 탈냉전시대 동맹관계의 핵심 이슈가 된 것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군사적 원인으로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공동위협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동맹이론의 대가인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의 붕괴요인으로 3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첫째로 위협인식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동맹은 주로 외부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다. 만일 동맹국 당사자들이 외부의 위협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거나 달라진다면 동맹관계는 약화되거나 와해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동맹의 회원국들이 직면한 위협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동맹은 붕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형성 당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또는 공동의 위협이 크게 약화되어 더 이상 동맹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동맹국의 일국 또는 전체가 과거에 위협을 받던 적대세력이 더 이상 호전적이지 아니라고 인식할 경우에도 동맹은 약화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경우 동맹은 해체되지 않더라도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⁵⁾

한미동맹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기에는 미소 양대진영의 군사적 대립 속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이들 초강대국과의 동맹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지탱해 온 것은 공동의 위협에

5)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Spring 1997), pp. 156-179).

대한 공통된 이해였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를 그리고 미국은 소련의 팽창 저지라는 전략적 기본목표가 수렴하였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 안보 체계의 전략적 기본목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명확한 적이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소련의 해체로 특정한 적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과 미국간에 전략적 목표와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작년(2019년) SCM회의 참가차 방한(訪韓)한 밀리(Mark A. Milley)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배치된 주한 및 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은 왜 거기에 필요한가?”⁶⁾라고 질문한다고 언급한 것은 공동의 전략적 목표가 사라진 한미동맹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냉전시대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소(對蘇)봉쇄전략의 일환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이란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시대 주한미군은 오직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소멸된 한미동맹은 동맹의 운영 과정이 있어 변화가 요구되었다. 그만큼 동맹관계에서 동맹국 각자의 방위부담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동맹형성의 원인이었던 공동의 위협이 소멸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자연스럽게 안보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안보적 이익이 줄어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익동맹에 부합하게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방위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안보에 상응한 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둘째, 경제적 원인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방비 감축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글로벌

6) (중앙일보), 2019년 11월 12일.

패권을 장악했지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속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1971년 처음으로 2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미국은 원하지 않았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장기간의 대규모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국력이 소진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채의 급증과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확대, 재정절벽(financial cliff)과 강제삭감(sequestration) 조치의 발생 등 어려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로 1년 새 26%나 급증했다. 국가부채도 2013년 16조 7,000억 달러에서 현재 22조 100억 달러로 불어났다.⁷⁾ 연방정부 예산(2019년 4.4조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물론 미국의 재정적자는 달러는 기축통화이므로 미국 밖으로 흘러나가 국제화폐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조장 또는 방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경제력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세계의 경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중 국방비는 7,380억 달러⁸⁾에 달한다. 미국인들은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데 지쳤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해외주둔 미군의 축소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군사력의 해외 전진배치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국가전략상 전진배치된 군사력의 감축은 가능하나 완전한 철수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아니다. 결국 미국의 선택지는 동맹국에 비용분담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국방예산의 한계를 인식한 미국의 전략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활용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정밀무기 개발 및 확보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기하

7) (연합뉴스), 2019년 2월 15일.

8) (연합뉴스), 2019년 12월 21일.

고, 군사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해외주둔 미군 유지비용을 주둔국에 최대한 전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주둔비용 분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동맹국간 안보비용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군이 1,000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 나선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고 우리는 25,000명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전략적 이해가 부족한 미국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주한미군을 보내 한국의 안보를 지켜 주는 것은 일방적인 원조이며 이는 내가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으로서는 ‘부자 동맹국’인 한국은 합당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원인으로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23년 미국의 먼로(James Monroe)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원칙’을⁹⁾ 선언한 이래 ‘고립주의’는 미국 외교의 기본정책이었다. 국제정치에 대한 고립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미국을 국제정치 무대로 불러낸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영제국이 몰락하고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되자 미국은 더 이상 고립주의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흔히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부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¹⁰⁾

9) 1823년 12월 제5대 대통령 먼로는 미국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유럽국가 자신들이 관련된 문제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거니와 그러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혹은 위협당할 때에만 우리는 이에 분노하거나 우리의 방위를 준비합니다.” 훗날 먼로 독트린이라고 명명된 연두교서 내용의 핵심은 ‘불간섭의 원칙’, 즉 고립주의로 요약되며 미국 초기외교의 기본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0) 1944년 7월 1일 미국을 비롯한 44개국 재무장관들이 미국의 뉴 햄프셔주 브레튼

로 규정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달러를 국제통화로 하는 ‘자유무역’을 보장 한다는 것과 이러한 자유무역을 미국이 보유한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보호하며, 체제 동참국에게는 ‘전략적 우산’을 제공하여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¹¹⁾ 이로부터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세계의 경찰역할을 수행해 왔다.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각국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한국 같은 약소국이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이 보호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큰 역할을 하였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세계 각국이 전후복구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 미국의 경제력이 강력했던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하향길로 접어들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정책에 의존한 국제통화정책은 언젠가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유무역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다. 견디다 못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 태환 중지를 발표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전략으로서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안보전략으로서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건재했다. 소련과의 냉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로 안보전략으로서의 브레튼우즈 체제도 위기가 찾아왔다. 세계문제에 미국이 개입을 유지해야 할 동기와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역사적 소명을 완수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전의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동참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미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전략적 이익을 넘어선 것이다. 체제유지에 대한 미국의 회의감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한 것은 셰일오일의 발견이었다. 셰일오일의 생산으로 인해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동지역의 안보에 신경 쓸 필요마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이

우즈에 모여 창설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관한 합의사항이다.

11) 피터 자이한 저·홍지수·정훈 역,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서울: 김앤김북스, 2018), pp 132-13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해 왔던 세계문제에의 개입을 자제하고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던 동맹국과 우방국의 행동은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경향을 더욱 부채질했다. 탈냉전으로 이념대결이 종식되자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하고 교역하게 되었다. 냉전시대의 군사안보 우선주의가 경제 우선주의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여 냉전시대 총부리를 겨누었던 중국, 소련(러시아)과 외교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호하고 있는 자유무역 질서와 전략적 우산이 미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책임감을 시들고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적 경향은 정치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주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사실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냉전 이후 집권했던 세 명의 대통령(클린턴, 부시, 오바마) 역시 자유무역체제를 보호하는 일에서 서서히 손을 떼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다만 그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은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더 이상 공짜 점심은 끝났다. 미국이 필요하면 합당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 철군하였다. 전 세계 자유무역을 목표로 1995년 출범한 WTO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많이 변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란 이름으로 배타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미국이 신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IV.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

한미간 방위비 분담 갈등의 핵심은 동맹을 체결하고 유지함으로써 획득하는 이익에 관하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라는 특정 개인이나 행정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 즉 뉴 노멀(New Normal)일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을 지탱해 왔던 위협의 공동성과 이익의 항구성이 소멸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 관계가 미래에도 똑같은 명분과 구조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동맹과 같은 방어동맹의 경우 공격형 동맹과 달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효과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다. 따라서 한국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를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부담이나 과소 부담은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동맹관계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미성향의 진보 진영의 공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미국의 지나친 압박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동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전략에 있어 한미동맹은 호불호(好不好) 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외교정책 변화, 주변국과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 파워, 선택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놓고 보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안보소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다. 국력신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뢰할 만한 동맹국의 신뢰할 수 있는 보장과 공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¹²⁾ 더구나 북핵문제로 인한 갈등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부상이 눈부시지만, 미국은 군사, 기술, 경제, 금융

12) 스킷 스나이더 저·권영근·권을 역, 『기रो에 선 대한민국』(서울: 연경문화사, 2018), p. 21.

등 과거로부터 강대국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독보적이다. 미국은 단일국가로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 금융분야의 영향력도 세계 최고이다. 또한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으며, 국방예산은 다른 모든 강대국을 합한 액수보다 많다. 게다가 세계 어디든 군대를 신속히 파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파병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엄연한 현실이다.¹³⁾ 게다가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나라의 국익에 핵심이 되는 전략 공유재(strategic commons)는 대부분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 현재 세계가 해상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사실상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다. 남중국해가 대표적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 바다와 하늘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의 번영에 직결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있어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안보·경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도 “한국의 외교관계는 강력한 한미관계, 한미일 3국 동맹, 지역 4강간의 상호협력이란 3개 골격 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숙명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입니다.”¹⁴⁾라고 언명한 바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가전략상 선택요소가 아니라 필수요소라면 한미동맹의 건강한 지속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않된다.

이번 방위비 분담 갈등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한미간 전략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전략대화에서는 한미동맹이 더 이상 금전적 이익의 다과(多寡)를 놓고 갈등하지 않도록 전략적·정치적·군사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간 한미동맹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와 공유가 필요하다. 냉전시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장하고 확대한다는 비전과 소련의 팽창(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¹⁵⁾ 냉전의 종식으로 이러한 전략적 비전과 목표가

13)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저·황성돈 역, 『전략적 비전』(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0), p. 32.

14) (조선일보), 2005년 4월 8일.

15) 1953년 11월 미국정부는 NSC 170/1을 통해 전후 대한정책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미국은 ‘자립경제와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외적 정부로서, 미국에 우호적이며,

달성되고 나자 한미동맹은 좌표를 잃었다. 한미동맹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간에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사실 그동안 한미 양측은 탈냉전 시대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함께 고민해 왔다. 2000년대 들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등의 동맹협의체를 두어 한미동맹의 미래를 구상하는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온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고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략동맹 구상에서 규정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 전염병 등 범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¹⁶⁾는 목표는 한국의 능력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이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던 이유이다. 전략적 비전과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치도 있고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을 설정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동맹환경이 많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다. 모든 강대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힘의 비중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는 패권국(hegemon), 즉 국제체제에서 유일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라이벌 강대국이 다른 지역에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미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패권국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국제협정을 통해 정치적·영토적 보전이 보장된,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홍용표, “이승만 시대의 한미관계”『한미관계론』(서울: 명인문화사, 2012), p. 65.

16)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 62.

17) 미어세이머 저·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서울: 김앤김북스, 2017), pp. 485-487.

중국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국이 되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여 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전략경쟁이 70여년 동안 지속되었듯이 미중간의 전략경쟁은 앞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중국 전략경쟁 네트워크의 한 요소로 기능하기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경제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난제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서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미국의 균형자 겸 중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 역시 중국이라는 지역 패권 추구 국가의 출현에 맞서 동북아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국간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과거의 동맹은 주로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맹은 공동의 적 이외에 공동의 이익창출이 더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다. 한미동맹도 공동의 위협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의 이익창출에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모겐소에 따르면 “동맹은 필연적으로 이해수렴(convergent interest)이라는 토대를 필요로 한다”.¹⁸⁾

한국에 있어서 한미동맹 유지의 이익은 명확하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 및 평화의 지속이라는 정치적 기능과 함께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억제하여 전쟁의 재발을 막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능은 한반도 분단체제 관리에 물론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¹⁹⁾ 따라서 한국에 있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는 사활적 국가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있어 한미동맹의 성격은 여전히 안보이익의 동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18)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Sixth Edition, McCraw-Hill, Inc, 1985, p. 202.

19) 김기정,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서울: 법문사, 1998), p. 604.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서 한미동맹 유지의 이익은 한국보다는 다소 불명확하다. 대중국 견제와 미국주도의 동북아 국제질서 유지라는 전략적 이익이 있지만, 소련의 팽창 저지라는 냉전시기 이익에 비하면 그다지 절실하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tangible) 이익도 아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치부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집중하는 원인이다. 미국은 이미 정치·군사적 안보이익 우선의 국가전략을 경제 및 기술과 상업적 이익 우선의 경제안보전략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동맹전략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요구로 한미동맹의 성격은 그 방향이 정해 진 듯하다. 이제 한미동맹은 전략적 이익의 공유와 함께 상업적 이익의 창출이 중요한 동맹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되려면 전략적 이익과 함께 경제적 이익 같은 손에 잡히는 이익도 창출하는 동맹으로 그 성격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동맹의 성격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한미 군사관계의 구조도 재편하여야 한다. 군사관계의 구조 재편은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체계와 군사관계의 실체로서의 주한미군이 그 대상이 된다. 이미 연합지휘체계의 재편 작업(전작권 전환)은 진행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주한미군의 재편이다.

한미동맹이라 하면 반드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떠오르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없는 한미동맹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상호방위조약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을 인계철선(trip-wire)으로 삼아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는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정책 변화, 한국군의 능력 신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가장 최근의 조정은 2006년 37,000명에서 28,500명으로 감축한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에 따라 그 역할 역시 한반도 방위의 ‘주도자’

20) Doug Bandow,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 World*,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6, pp. 35-36.

에서 ‘지원자’로 변경 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도 바뀌었다.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²¹⁾에 따라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방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다. 한국방위가 주 임무일 뿐 미국의 필요에 따라 세계각지에 투입될 수 있는 기동전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대이다. 아울러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전력증강은 물론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억제력의 상당부분을 이제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28,500명이라는 주한미군의 병력규모와 그 구조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 주한미군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던 시대는 지났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미동맹의 핵심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는 미국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수행과 한국의 북한위협 억제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가 무엇인지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신장된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규모와 구조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 검토과정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미국의 인식도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필요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평한 방위비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를 도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불가피 하다고 설득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의 재편을 검토함에 있어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제시했던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충분성이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나 방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군사력을 말한다. 한미동맹은 방어형 동맹이고 주한미군은 방어를 전

21) 2006년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을 허용하였다. 배성인, 『전략적 유연성』(서울: 메이데이, 2007), pp. 75-76.

력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의 전략균형과 대중국 견제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미군전력의 규모와 구조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면 적절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SOFA를 개정하여야 한다. SOFA 제2조에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1항에는 “시설과 구역의 사용 이외의 일체의 미군 유지경비는 미국이 자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시설과 구역은 물론, 광열비, 도로/항만/철도 이용료, 제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 즉, 무상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 지원내용을 금전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초 SOFA체결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과 구역의 무상제공으로 지원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므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SOFA도 체결된지 50여년이나 지난 만큼 동맹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 하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상기 SOFA의 조항을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한국과 미국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SOFA를 개정하면 한국이 지원하는 모든 간접 및 직접지원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 한국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역시 한국의 기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방위비 분담 규모를 두고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방위비 분담’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SMA의 개념은 NPSC, 즉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둔비용은 ‘현지발생 비용’, 즉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미국 또는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SMA를 ‘방위비 분담’이라고 지칭함으로써 한국을 ‘방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오해가 발생한

다. 정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사실의 인식과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는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²²⁾ 는 드 하트 SMA협상 미측 대표의 주장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MA를 ‘방위비 분담’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주둔비용 분담’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해야 한다. 그리하여 SMA의 대상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인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현지발생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동맹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맹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냉전기 동맹환경은 비교적 정적이고 단순했던 반면, 탈냉전기 동맹환경은 동적이고 복잡적이다. 냉전기 70여년동안 변함이 없었던 동맹환경은 탈냉전기에 들어서서는 한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맹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동맹도 탈냉전시대에 맞게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기민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당시 설정한 ‘21세기 전략동맹’구상이 유명무실화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동맹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혁신(up-grade) 노력을 소홀히 한 것도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한미가 지혜를 모아 동맹 재조정 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미간에는 매년 개최되는 안보협의회의(SCM)라는 좋은 동맹 협의체가 있다. 동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동맹환경을 평가하고 필요한 수정·보완 노력을 지속한다면 한미동맹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쟁력있는 동맹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2) (조선일보), 2019년 12월 19일.

V. 결 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이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실시한 한미동맹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에는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²³⁾ 그 만큼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인들에게는 부당하게 보인 것이다. 혈맹(血盟)이라며 지난 60여년 동안 결속력을 과시했던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이라는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공통의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 시대에 한미동맹의 조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실주의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전망은 동맹의 종식이나 수정을 가정할 수 있다.²⁴⁾ 즉,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미동맹체제는 종식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과 소련간의 세계적 냉전대결과 그 산물로서의 남북한 분단 및 군사적 대결을 전략적 기본전제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 연방의 해체와 냉전의 종식으로 이 같은 기본전제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국제정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떠한 동맹도 항구적이지 못하고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와 환경변화에 따라 소멸 또는 변질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전략에 있어 한미동맹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특히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방위공약이 신뢰를 잃고 후퇴한다면 한국은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정치·군사적 위협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조약상의 방위공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23) (프레시안), 2019년 12월 17일.

24) Jitsu Tsuchiyama, "The role of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ast Asia: The Case of U.S.-Japanese Alliance, Tae-Hwan Kwak and Thomas L. Wilborn, eds,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pp. 105-113.

한미동맹 발전 노력은 변화한 동맹환경을 정확하게 재평가하는 작업에 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냉전체제라는 동맹형성의 전략적 기본전제가 사라졌으므로 동맹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냉전종식 이후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좌표를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의 적이 사라져버리면 동맹은 흔들린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렇다. 그러나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동일하다면 공동의 적이 사라진 다음에도 더 강하고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한미동맹은 안보적 이익동맹으로서 기능하였지만, 탈냉전시대에는 경제적 이익동맹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도 그러한 성격의 동맹으로 진화·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려면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창출하는 동맹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탈냉전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약화된 반면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한국군의 능력은 강화되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다. 동북아 전략 수행을 위한 미국의 필요와 한반도의 전략균형 유지를 위한 한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는 면밀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주둔 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체결된지 50여년이 지나 동맹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SOFA의 방위비 분담 관련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조직과 제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려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예외는 아니다. 한미동맹은 현재 20세기 냉전의 유산을 정리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혁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어떠한 동맹관계라도 납세자인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냉전 종식 이후 각국 정부는 안보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워 졌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회피를 안보 무임승차(free ride)라며 불만을 느끼고 있고, 한국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느껴 불만이다. 방위비 문제로 말미암아 한미 양국민들이 한미동맹을 ‘돈 먹는 하마’로만 인식하게 될 경우 한미동맹은 쇠퇴와 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양국 모두의 국익에 유리하다면 양국 외교·국방을 포함한 관련 당국자들은 동맹강화를 위한 재조정 작업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맹 재조정 방향에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작업에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21세기 전략동맹’이 유명무실화된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매년 개최되는 SCM 등 동맹협의체에서 동맹의 비전과 목표, 성격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0.02.23]

[논문심사일 : 2020.02.14]

[논문수정일 : 2019.02.28]

[게재확정일 : 2020.03.06]

참고문헌

- 국방부, 『방위비 분담』, 국방부, 1987.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2010.
- 권철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 설정』, 국방대학교, 2000.
- 김기정,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 김성한,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략연구』 제48호, 2010.
- 김우상, 『신 한국책략』, 나남신서, 2007.
- 김원배,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주) 나남, 2018.
-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올아카데미, 2003.
- 미어세이머 저·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국』, 김앤김북스, 2017.
- 심지연·김일영,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2004.
-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아산정책연구원, 2019.
- 이상현·송대성, 『한미동맹의 변환』, 세종연구소, 2008.
- 이상훈,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한미군의 역할』, 세종연구소, 2001.
- 스콧 스나이더 저·권영근·권을 역, 『기로에 선 대한민국』, 연경문화사, 2018.
- 엔쉐통 저·고상희 역,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글항아리, 2014.
- 제성호, 『한미동맹의 법적이해』, 국방연구원, 2015.
- 조성훈, 『한미 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즈비그뉴 브렌스키 저·황성돈 역, 『전략적 비전』, 아산정책연구원, 2016.
- 최윤식,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지식노마드, 2018.
- 피터 자이한 저·홍지수·정훈 역,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김앤김북스, 2018.
- 홍용표, “이승만시대의 한미관계” 『한미관계론』, 명인문화사, 2012.

-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Sixth Edition, McCraw-Hill, Inc, 1985,
- Doug Bandow,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 World*,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6.
- Jitsu Tsuchiyama, “The role of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ast Asia: The Case of U.S.-Japanese Alliance, Tae-Hwan Kwak and Thomas L. Wilborn, eds,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 (중앙일보), 2019년 11월 12일.
- (조선일보), 2005년 4월 8일.
- (조선일보), 2019년 12월 19일.
- (프레시안), 2019년 12월 17일.
- (연합뉴스), 2019년 2월 15일.
- (연합뉴스), 2019년 12월 21일.

Abstract

Conflict over Cost-Sharing and Measures for Improving ROK-U.S. Alliance

Kim Seung Taek

ROK-U.S Alliance is under conflict due to cost-sharing issue ignited by President Trump. The base of the alliance is mutual trust. Conflict over cost-sharing is not appropriate for healthy continuation of the alliance. There are several complicated reasons for conflict over cost-sharing issue. The first reason is the demise of common threats due to collapse of Cold War. It is natural that Alliance focus on cost-sharing issue after demise of common threats. The second reason is the pressure of defense budget cut due to weakened economy of America. America must sustain forward deployed forces to maintain global hegemony regardless of financial constraint. The best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shift stationing cost on to the host nation. The third, America which is not interest in the role of world police after the end of Cold War returns to traditional isolationism. America make a request for resonable cost to the world when it need her while restrain herself from intervene to world affairs except necessary.

It is highly possible that cost-sharing could be a core issue in the future in view of changed alliance circumstance. To strengthen ROK-U.S. alliance, innovation adapt to changed situation and circumstance is necessary. First of all, Alliance must reset strategic vision and goal. Secondly, Redefining alliance's characteristics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tructure of the ROK-U.S. military relationship need to be adjusted following redefined alliance's characteristics. Be more specific, size and organization of USFK should be reviewed and adjusted. Continues innovation following changing situation and circumstance is necessary for every organization and system for survival. If ROK-U.S. alliance and USFK are beneficial to both country's interest, foreign and defense officials of both countries should focus on the alliance readjustment issue which will result in strengthened alliance.

Key Words: cost-sharing, burden-sharing, ROK-U.S. alliance, SMA, USFK, mutual defense treaty, SOFA, stationing cost, ROK-U.S. alliance strengthening.

북한 SLBM 위협실태와 전략적 의도 분석

방호엽 *

- I. 서 론
 - II. 본 론
 - 1. 북한 잠수함 개발 및 능력
 - 2. 북한 SLBM 위협분석
 - 3. 북한 SLBM 사용 연계성
 - 4. 북한 SLBM 대응전략
 - III. 결 론
-

*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외래연구교수 / e-mail: bhang1030@naver.com

논문요약

북한의 SLBM 잠수함위협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사출시험과정을 고려해 볼 때 수중발사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해 졌다는 점과 잠수함을 이용한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차 북한이 소형화·경량화가 완료된 핵탄두를 잠수함에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빠른 시간 안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핵의 제2격 능력을 갖춘 북한의 SLBM은 은밀성을 이용하여 접촉된 전선에서 화력을 통해 적을 소모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방으로 우회 침투하여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국가의 전쟁지속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략체계로서 국가의 존재성까지 잠식해버리는 무서운 핵미사일 적용의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핵의 2격 공격 능력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북한의 저의에 끌려가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능력과 해결전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적화전략을 고려한 핵미사일의 SLBM사용 연계성에 대해서 먼저 해양감시체계와 수중공격능력을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구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협조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1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2차적으로는 실질적인 핵 보유정책과 병행하여 핵 잠수함개발로 발전해 나가는 것만이 시기성과 함께 적절한 단계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SLBM을 이용한 핵위협에 적극적인 핵억제대응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주제어 : SLBM, 잠수함, 핵미사일전략, 핵보유국, 핵 공격

I 서론

북한 김정은은 여러 차례의 잠수함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하 SLBM)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로 인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의 사출시험을 고려해 볼 때 발사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해 졌다는 점과 잠수함을 이용한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차 북한이 소형화·경량화가 완료된 핵탄두를 잠수함에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빠른 시간 안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잠수함이 SLBM을 통해 언제, 어디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조차 어려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SLBM은 한미동맹에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위협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과 방안은 무엇이고 그 준비를 어떻게 적용하며 발전시켜야만 하는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북한 잠수함 개발 및 능력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 본토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SLBM이 만들어져 적용되기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이 SLBM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핵미사일에 대한 실체를 통해 핵 공격의 제2격 능력을 가진 SLBM에 핵미사일을 적용하려는 의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II 본론

1. 북한 잠수함 개발 및 능력

가. 잠수함 개발실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1960년 위스키급 잠수함을 도입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1976년 신포와 마양도 조선소에서 로미오급 3척을 자체 건조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매 14개월마다 한척씩 건조하였다. 따라서 로미오급은 총 19척, 상어급은 총 38척

그리고 유고급은 총 13척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70여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잠수함(정)의 능력은 대부분 크기가 소형이고 상당히 노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협 면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해상경계중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된 것처럼 북한 잠수함(정)의 위협은 한국해군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북한 잠수함 보유

구분	신포급	로미오급	상어급	유고급
배수량	2천톤	1천800톤	300~350톤	90~130톤
보유	1척	19척	38척	13척
비고	SLBM	2척 퇴역, 1척 침몰		10척 퇴역

* 국방백서 2016,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등 참조

북한의 SLBM 기술의 개발기반구축은 1992년 구소련 해체직후 혼란기에 마카에프 설계국(Makeyev Rocket Design Bureau)전문가들이 북한에 SLBM관련 정보와 기술 그리고 부품 등을 이전하였다.¹⁾ 그리고 1993년 북한은 3발의 SLBM을 탑재했던 골프급 잠수함 수척을 러시아로부터 고철로 수입해 미사일 발사 장치와 관련기술 및 부품일부를 획득하였다.²⁾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상어급/유고급 등 구형잠수함(정)은 SLBM을 탑재할 수 없는 잠수함이다. 때문에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획득한 기술과 부품 등을 사용하여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연구·개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³⁾

- 1) 마카에프 설계국은 소련 최고의 SLBM 개발기관으로서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원조인 R-27(SS-N-6) SLBM을 설계하였다.
- 2) 북한이 골프급 잠수함을 운용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참고하여 신포급 잠수함에 SLBM 발사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amu.wiki/w/골프급 (수정: 2019년 8월 30일) 참조.
- 3) 조셉 버뮤데즈(Joseph S. Bermudez)는 북한관련 군사전문사이트인 38north에 “북한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 전용 조선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 건조가 위성사진을 통해 목격되었다”고 밝혔다. 이 잠수함은 러시아가 운용한 골프급

구소련은 골프급 디젤잠수함을 'Project 629'라는 명칭으로 배수량은 3,000톤,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디젤잠수함으로 개발하였다.⁴⁾ 여기에는 3개의 SLBM 수직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해 선체중앙의 함교탑(Coning tower)공간을 활용하는 매우 독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⁵⁾ 하지만 북한이 연구·개발하여 공개한 실포급 잠수함의 각종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SLBM을 1개 정도 탑재 가능하게 개량한 것으로 분석된다.⁶⁾ 북한이 이처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LBM 연구·개발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SLBM은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의 위상을 인정받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외교적으로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중단을 주장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더불어 미국은 비핵화협상에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는 상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결정적인 핵의 2차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SLBM의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미동맹의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비장의 카드가 SLBM 공격능력이라는 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잠수함을 도입하여 이를 해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것으로서 실포급 잠수함(Sinpo-class)으로 평가하였다. (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http://38north.org>)

- 4) 북한은 1993년 러시아에서 고철로 들여온 골프급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SS-N-6 SLBM을 역설계하여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문근식,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해양안보포럼』 발표자료 (2016.8.29.), p.30.
- 5) 『연합뉴스』 (2016년 8월 25일)
- 6) 하태영,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제33권 제3호(한국국방연구원, 2017년 가을), p.73.

둘째, SLBM은 김정은체제 유지를 확고히 하면서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정권의 견고한 결속을 위한 카드이다. 김정은이 현재 대를 이어 추진하고 있는 독재적 우상화는 정권의 불안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2016년 4월에 있는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보위부의 도움으로 집단으로 탈북 하였고 이어서 8월에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탈북 하는 등의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내부적 성과가 별로 없는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SLBM 사출시험 성공과 신포급 잠수함 건조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 김정일의 대업을 이어받아 서방의 강대국이 보유한 전략무기인 SLBM을 개발 성공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결속을 더욱더 튼튼하게 다지려는 의도라고 본다.

셋째,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SLBM 작전여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핵의 2차 공격 능력이 있는 SLBM의 핵 투발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SLBM은 잠항한 상태에서 공격준비과정을 사전에 탐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탐지와 억지능력을 비켜갈 수가 있다. 그래서 ICBM은 실제사용하기 어려운 협상용인 반면에 SLBM은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SLBM 개발을 절대포기하지 않고 기존 2,000톤급보다 더 대형화된 3,000톤급의 전략잠수함건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잠수함 전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게임 체인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침투수단으로만 운용해 왔던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잠수함전략에서 탈피해 대단히 공세적인 성격의 잠수함전략을 세워 나가며 이에 맞추어 교육훈련 역시 변화된 해군전략을 고려하여 공세지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나. 잠수함 SLBM 능력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SLBM 개발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

다. 그래서 2014년은 육상에서 SLBM 사출시험(launch)을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해상에서 실시하며 SLBM 수중사출시험을 언론에 노출시켰다.⁷⁾ 2015년 5월 8일 당시 시험에서 200m 상승 후 해상 낙하한 결과를 두고 성공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2015년 11월 28일에 실시한 수중사출시험에는 개발 중인 신포급 잠수함을 동원하여 SLBM의 중요한 기술인 콜드런치(cold launch)에 대한 많은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⁸⁾ 이후 다시 2016년 4월 23일 신포 동북방 해상에서 실시한 수중사출시험은 수면으로 부터 공중 30km까지 상승하는데 성공하였다.⁹⁾

그리고 북한 조선통신은 ①고체연료사용, ②로켓동체의 분리, ③핵 기폭장치작동 등과 ④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결과는 대성공이라고 밝혔다.¹⁰⁾ 이어 2016년 8월 24일에 북한은 신포인근해상에서 SLBM 1발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 SLBM은 최고 고도 약 600km로 약 500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 인근에 떨어졌으며, 종전 최대비행거리 30km를 4개월 만에 15배 이상을 증가시켰다. 특히 이날 발사된 SLBM은 일본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각발사를 하여 사거리를 500km로 짧게 조정하였지만, 만약 정상적으로 발사하였다면 1,000km 이상까지도 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¹¹⁾ 또한 발사각을 보면 2015년 5월에는 74도 정도였지만, 2016년 4월에는 거의 수직으로 발사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발사

7) 국방부는 “북한 SLBM이 잠수함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5년 5월 13일)

8) 콜드런치(Cold launch)기술이란 발사관 내에 장착된 가수발생기를 통해 미사일을 일정고도로 밀어내고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을 말하며 사출 후 점화에 실패할 경우 잠수함 선체에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지만, 핫런치(Hot launch)보다 적은 공간이 사용되고, 안정성도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SLBM 탑재 잠수함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9) 북한은 잠수함에서 수면까지 SLBM을 밀어내고 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엔진이 작동하는 냉 발사체계(cold launch)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6년 4월 23일)

10) 함참은 비행거리가 SLBM의 최소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 미치는 30km에 불과하여 실패하였지만 콜드런치 기술의 진전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합뉴스』 (2016년 4월 25일)

11) 『연합뉴스』 (2016년 8월 24일)

의 안정성을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¹²⁾

<표 2> 북한 SLBM 개발일지

2015년			2016년			2019년
5월	11월	12월	4월	7월	8월	10월
성공 주장	실패 추정	실패 추정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수중 사출	잠수함	수중 사출	정점고도: 10여km 사거리: 30여km	정점고도: 10여km 폭발	정점고도: 550여km 사거리: 500여km	정점고도: 910여km 사거리: 450여km

이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은 잠수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SLBM인 북극성-1호를 2016년 4월 23일 함남 신포 동북방 해상에서 첫 시험 발사하여 30km가량을 비행하였다. 이후 같은 해 8월 북극성-2호 발사 때는 고도 550여km, 비행거리 500여km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 2일 3년 5개월 만에 정점고도를 사거리로 환산하면 1,900여km로 추정되는 새로운 형상의 북극성-3형을 수중발사 하였다. 이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정에서도 비밀리에 관리하며 발전시켜 SLBM을 적정한 시기에 노출시켜 정치적으로 사용한 결과물이다.¹³⁾ 이와 같이 북한의 SLBM은 북한 전역에서 주한미군 기지와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항구 및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북한 영해에서 일본전역의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서태평양 쪽으로 은밀히 이동한다면 괌 미군 기지를 포함한 미국의 본토 까지도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¹⁴⁾

12) 『연합뉴스』 (2016년 4월 26일)

13) 군사 전문가들은 북극성-1형의 동체 하단부에 달렸던 그리드핀(Grid Fin·격자형 날개)이 북극성-3형에는 없어 비행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북극성-1형은 길이 7.35m, 직경 1.1m 정도였으나, 북극성-3형은 길이 10m 이상, 직경 1.4m 이상으로 추정한다.

14) 『연합뉴스』 (2016년 8월 25일)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구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SLBM 기술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수십여 차례의 지상수중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SLBM 기술력과 전력화 시점을 평가하는 것은 대응방책을 수립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 SLBM의 전력화는 ①지상사출→②수중사출→③시험발사→④초기비행→⑤전력화의 5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에 북한의 SLBM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전력화의 단계별 주요요구조건에 비추어 볼 때 총 5단계의 전력화 과정에서 4단계까지의 기술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⁵⁾ 그래서 이를 토대로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보면 이미 전력화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이제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잠수함 건조와 핵탄두의 소형화에 집중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입증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SLBM의 전력화 단계

구 분	주요 요구조건
지상사출	·SLBM 수직발사대를 지상에 설치하여 시험 ·지상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 발사관 설치하여 시험
수중사출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관을 통해 미사일 보호캡슐을 물위로 발사
초기비행	·SLBM이 캡슐에 담겨 부력에 의해 수면위로 상승한 후 ·캡슐이 깨진 후 점화하여 공중으로 상승(콜드런치)
시험발사	·SLBM이 수중 잠수함에서 이탈 후 로켓추진 장치 작동 ·목표물을 향해 장거리 비행(최소 300km이상)
전력화	·유도장치를 탑재한 SLBM이 장거리 타격능력 보유

* 문창환, "북한 SLBM 위협과 대응방향" 『STRATEGY 21』통권40호, (2016, 겨울호), p.91.

15) SLBM 개발은 통상 4단계(1단계: 지상시험, 2단계: 정박잠수함 시험, 3단계: 해상에서의 수중사출시험, 4단계: 수중발사시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수중발사시험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근식, 앞의 글, pp.37~38.

더불어 현재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2000톤급인 신포급 잠수함은 규모가 적어 SLBM을 사실상 한 발만 탑재 가능하고 연속발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잠수함 특성상 발사와 동시에 자신의 위치가 개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SLBM 한발만 가지고 실전운용 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¹⁶⁾ 여기에 SLBM은 한·미·일 ISR자산에 위치가 노출될 시 전략적 목표달성실패는 물론이고 잠수함 자체의 생존성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신포급 잠수함은 디젤잠수함으로서 주기적인 스노클링(snorkeling)¹⁷⁾이 어려워 지상으로 노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전략무기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 개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3000t급 신행 디젤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포급 잠수함의 배수량은 2000t에 불과하여 잠수함이 적의 탐지망을 피해 SLBM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려면 수심이 50m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3000t급 이상이 되어야 SLBM의 위협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¹⁸⁾ 두 번째 방향은 3500t급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장거리 잠수능력을 갖추는 방법이고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관심의 시야를 가리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은 자신들이 스스로 비핵화를 선언하고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16) 김정은,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2~3기 갖춘 신행 잠수함 제조지시, 『연합뉴스』 (2016년 8월 26일)

17) 디젤 엔진을 구동원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 수중에서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18) 국방부는 2019년 7월 24일 “북한이 SLBM 3개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신행잠수함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고래급 잠수함보다 조금 큰 것으로 보이며 진수 전 단계에서 이를 공개한 것이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31일)

결국 미국에 대한 SLBM의 핵 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만들어 비핵화 보다는 감축의 협상력을 획득하는 점을 노리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SLBM의 완성은 한미동맹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만들어내 유사시 한국에 지원하는 미군의 전력증원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경제력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것은 북한정권이 가장 취약하게 생각하는 정권유지에 절대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김정은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핵을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전력을 포기하지 않고 은밀히 추진해 나가는 부분인 것이다.¹⁹⁾

2. 북한 SLBM 위협분석

가. SLBM 전략적 가치

북한이 노리고 있는 SLBM 능력보유라는 의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잠수함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능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 핵 공격의 제2격(The second strike)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의구심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능력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 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전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는 SLBM에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LBM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여 보면 첫째, 북한은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보면 짧은 종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현재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의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발사체(TEL)의 지상무기로도 충분히 공격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최소억제능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19) 『연합뉴스』 (2016년 8월 25일)

왜냐하면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 가능하여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하거나 발사 시 방어와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잠수함의 경우 일단 물속으로 잠항하고 나면 존재자체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공격의도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²⁰⁾ 그래서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한미연합전력의 공격에도 살아남아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결국 이것이 제2격 능력을 보유한 최종핵병기의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strateg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핵전략이기 때문이다.

<표 4> 억제전략 비교

대응방법	기본개념	특징
최대억제	공격보다 더욱 큰 보복으로 위협	군비경쟁유발
최소억제	공격보다 작지만 결정적인 목표에 대한 보복으로 위협	최소비용 효과달성

* 문창환, "북한 SLBM 위협과 대응방향"『STRATEGY 21』통권40호, (2016, 겨울호), p.95.

둘째, 북한이 핵 공격의 제 2격 능력을 가져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는 의미는 먼저 확장억제란 용어는 핵전략용어로서 동맹국을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모든 핵·재래식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공약으로서 이를 통해 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단념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 속에 미국은 북

20) 김혁수 예비역해군제독, “아무리 조악한 잠수함이라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다”『중앙일보』(2016년 4월 26일)

한으로부터 한국이 핵 공격위협을 받을 경우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 개념이 적용된다.

하지만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여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하였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한국의 확장억제를 지원할 경우 미국본토의 주요도시 또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도함으로써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본 또한 자국에 있는 미군의 군사시설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일본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가속화되어 일본국민들의 반핵내분은 국민적 분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미일동맹의 입장에서 과거 에치슨 라인(Acheson line)²¹⁾을 주장한 것처럼 미국과 협조하여 한국을 배제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이제 북한의 SLBM 위협은 한국군 대응능력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우리군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정보복전략(KMPR)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개념에 대한 대응노력은 시간적부분에서 예산과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노력이 함께 일치되어야 한다. 여기에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find)하고 표적위치를 식별(fix)하여 효과적으로 파괴(destroy)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결심해서 타격하는데 최대 30분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핵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1,000여기이며 여기에 이동발사대는 약 250여기로서 킬체인(Kill Chain)에 역공격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군은 가지고 있다.²²⁾

21)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1893~1971)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으로 연결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핵·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최초식별이 어려운 잠수함에서의 핵·미사일 공격은 우리의 방어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이에 대한 대비능력을 갖추어 나가야한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 발사되는 지대지유도탄, 중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합동직격탄, 레이저유도폭탄 등의 운용체계성과 실시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위해 군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를 통해 실시간에 감시하고 정찰하며 적시적인 공격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실행의지 등의 적시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SLBM 공격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SLBM 운용 전술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국가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그 중 전쟁수단으로서 잠수함은 첫째, 작전여부와 시기, 장소 등을 알 수 없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일정기간 외부로 부터의 지원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기동하여 지시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수함은 주로 미사일을 이용한 무력투사 임무를 수행하며 육군의 지상 작전을 직접지원하기보다는 전쟁 잠재력을 파괴하는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때문에 잠수함의 SLBM전력은 해양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수중무기체계는 다른 무기체계보다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양의 열세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한미동맹의 우세한 해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SLBM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 잠수함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잠수함지휘실태를 분석해 보면

22)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 『KINU 연구총서』 18-4, (통일연구원, 2018. 12. 15), pp.68~69.

SLBM을 비밀리에 운용하는 핵심군사지휘시설을 수심에서 수백미터의 지하에 위치한 지하갱도에 위치시켜 지상으로서는 나오지 않고 지하에서 지하로 이동하며 이중, 삼중으로 요새화된 벙커에서 은밀하게 지휘한다. 때문에 지휘부나 잠수함자체를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에서 한미동맹의 작전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대를 4D 작전개념(Defence 방어, Detect 탐지, Distrupt 교란, Destroy 파괴)을 적용하고 있다.²³⁾ 하지만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 이러한 작전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소형화된 여러 발의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을 동·서·남해 중에서 임의의 장소를 선택하여 발사하게 되면 한미연합군의 방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여기에 변화된 전쟁방식을 적용하여 전략적으로 전쟁발발 수일 전에 잠수함을 출항시켜 기도비닉을 유지하는 작전술을 시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마양도나 차호를 출항한 잠수함이 동해의 깊은 수중으로 잠항하여 자취를 감추고 임무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잠수함을 감시 및 추적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정보 및 감시정찰과 추적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경우에 잠항한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핵미사일을 수중으로 발사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며, 여기에 수중에서 눈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잠수함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잠항하기 전 수상 작전능력을 강화하여 항내에 있을 경우부터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필요시 지상 타격하는 공격형 선제잠수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SLBM을 운용하는 것은 위기 시에 명령을 받고 출동할 때까지 잠수함을 항구근처에 배치해 두는 요새모델(bastion model)과 잠수함 전력의 일부를 바다에서 억지순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억지패트롤 모델

23)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하였다. 『국방백서』 2016년

(continuous-deterrent patrol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²⁴⁾ 이를 평가해보면 북한은 경제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속적 억지 패트룰 모델을 채택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어 중앙 집중적이며 독단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새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²⁵⁾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제압방법을 정립해보면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은 출항하기 전부터 잠수함기지와 잠수함에 대한 강습계획을 발전시켜 구체화하는 것이다. 둘째, 억제적인 측면에서는 출항한 SLBM 잠수함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여 수상작전과 대잠작전태세를 유지함으로서 측·후방으로 침투를 하고자 하는 도발의지를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SLBM 잠수함을 추적가능하고 유사시에는 침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북한 SLBM 사용 연계성

가. 핵미사일 위협능력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려는 것은 결국 핵의 최종사용 수단인 SLBM 사용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북한은 핵에 대한 보유의욕을 1956년부터 가지게 되었다. 당시 구소련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 IRT-2000, 2MW를 제공받아 핵관련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렇게 축적된 핵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1980년 7월부터 영변에 5MWe급의 원자로를 구축하여 1987년에 가동에 들어가 1990년에는 해당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용덕동에서 고폭 실험을 약 40여회 실시하면서 2006년 10월 9일에 2kg의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1kt 미만의 위력이 나온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창리 고폭

24) Vipin Narang and Ankit Panda,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What a Nuclear Launch Might Look Like" *War on the Rocks*, 15 September 2017.

25) 김보미,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제와 핵 안정성" 『국가전략』제22권 제3호 (2016), p.40.

실험장에서 고폭 실험을 10여회 실시한 이후 2009년 5월 25일 위력이 2~6kt 으로 형성된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12일에 위력 6~7kt의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소형화·다종화된 핵실험을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3년 뒤인 2016년 1월 6일에 위력 6~7kt의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불과 8개월 이후인 동년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폭탄의 표준화와 규격화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위력이 향상된 10~11kt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한 2017년 9월 3일에 위력이 50~100kt이상으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소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⁶⁾

<표 5> 북한, 시기별 핵무기 개발능력 변화내용

기간	핵개발 내용
1994~1998	·5MWe 원자로에서 연간 약 6kg 플루토늄 생산능력 보유 ·영변에서 고폭실험 약 70여회 실시
1999~2003	·2003년 7월 재처리완료로 플루토늄 25kg 확보 ·용덕동에서 고폭실험 약 40여회 실시
2004~2008	·2005년 5월 폐연료봉 8천개 인출완료 ·2005년 11월 플루토늄 약 12kg 추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실시(위력 1kt 미만) ·금강리 고폭실험장에서 고폭실험 10여회 실시
2009~2013	·2009년 핵연료재처리 선언 후 플루토늄 약 8kg 추출, 누적55kg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실시(위력 2~6kt)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실시(위력 6~7kt) ·2013년 고농축우라늄(HEU) 175kg 확보
2014~2017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실시(위력 6~7kt)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실시(위력 10~11kt)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실시(위력50kt~100kt)

* 정영태외 6명,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2014)참조

26) 정영태외 6명,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INU연구총서』 14-11,(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119~12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핵개발 기반 능력은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인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를 자체적으로 완성하여 핵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시설은 영변 핵 단지 내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 가공공장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실험장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를 연구할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량을 분석해 볼 때 20kt의 표준형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을 평균 4~6kg으로 적용한다고 보았을 경우 1987년 가동 이후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보유량을 고려해 보면 60여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달성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핵탄두를 경량화 하여 탄도미사일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하였다고 강조한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⁷⁾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SLBM 공격가능성과도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연 이러한 핵을 사용할 의도는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전술핵 및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 보유 정책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핵우산의 약화로 자위적 군사력 확보차원과 1990년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선군정치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때문에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지금은 핵이 외교협상 카드로써 자신들의 체제내부결속과 정권수호에 더없이 유용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제상황에 맞물린

27) 박창권,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한국의 포괄적 대응 전략” 『주간국방논단』 1630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2.

체제유지와 관련된 상황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핵 공격을 앞세워 위협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확실한 핵 공격위협은 바로 SLBM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나. 핵미사일 SLBM 적용의도

앞서 평가한 점을 고려 시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한 상태로 보고²⁸⁾ 체제유지에 필요한 수단으로 핵을 어떤 의도로 위협하고 SLBM과 연계하여 사용할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 중심의 비합리적인 수령중심의 독재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비합리적이거나 충동적일 수 있다. 여기에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개혁과 개방의 길을 포기한 채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남북 간에 어떤 국지적 도발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만들 개연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남북 관계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고 보고 비합리적인 행위자 형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통일을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 과업의 달성을 위한 적화통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을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상태를 보면 2013년 3월 27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통하여 “전략 로켓군과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로 진입시키며 여기에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법적근거로는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령에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적대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을 의미하고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공화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인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

28) 권태형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경기도 성남: 북코리아, 2014), p.40.

는 점보다는 위협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실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며 필요시 SLBM과 연계할 것인가? 라는 점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를 예상하는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네 가지 상황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 정치·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위협하거나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와해에 필요한 연합훈련과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필요시 친북정치범의 석방 등의 법적여건을 완 하 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친북세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여건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는 국론이 분열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견해가 발생하여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이 공고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이 안보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민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여야가 분열되고 화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군사적 위협의 상태가 위중함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방의 의무인 안보상황 또한 영향을 받아 군사적인 면에서도 북한의 요구를 쉽게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여주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요구를 한국정부가 여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를 받아주는 상태가 되면 북한은 더욱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수용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적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자만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사용을 SLBM과 연계하여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군사적 도발과 핵사용을 SLBM과 연계하여 병행적으로 위협하여 경제회복의 기틀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경제병진노선을 채

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핵으로 경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병진노선보다는 병진전략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경제압박상황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상태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위협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²⁹⁾ 예를 들어 북한은 특수부대를 간첩으로 위장침투 시켜 한국 내에 혼란을 유도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가운데 이러한 정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이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 한국정부의 보복을 차단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응징여부를 격렬하게 토론하게 되지만 응징보복의 결론을 유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2차 위협이 결국 핵 공격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상황으로 점쳐지면서 응징보복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응징보복을 실시하자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은 더욱 많은 책임과 배상을 조건으로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한국 내에서는 더욱 더 큰 분열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미국과의 직접적 협상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협박 등에 핵 사용가능성을 SLBM과 연계하여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의 공격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미 본토에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인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공격역량을 SLBM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언론이 “북한은 동해안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한 가운데서 폭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체새(Juche Bird)’ 실험에 나서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⁰⁾ 왜냐하면

29) 방호엽, “북한 특수전력의 운영특징 및 적용변화 연구: 핵·경제병진 전략과의 병합적 관계 모색” 『정보사 위탁과제』 (정보사령부, 2017), pp. 75~76.

북한은 결국 이 같은 실험을 성공해야 만이 SLBM을 이용한 실질적인 핵 공격위협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실험이후에 자신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게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입장에서 핵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자신감을 들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까지 고려하여 SLBM의 또 다른 공격 실험을 한반도 주변에서 강행할 것이다. 이는 한국을 이용한 정치·군사적 협상이 결국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넷째, 한국의 특정도시 등에 대한 재래식 공격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자신들의 경제상황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아 체제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핵 공격 보다는 재래식 공격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대화를 단절한 상태를 만들어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대립이 감정적으로 격화되고 점점 극단적인 대립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 테러나 장사정포 공격 등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미동맹의 2차 반격을 SLBM을 이용한 핵 공격으로 무마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SLBM의 위협범위는 우리에게 있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북한의 여러 가지 수단중의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30) 주체제는 1962년 미군이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인 폴라리스를 태평양 바다 밑에서 발사한 ‘군함새(Frigate Bird)’ 작전을 본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미국의 보수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협적인 수준에 달하면서 우려할 만한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핵미사일 위에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른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두 가지 실험을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19. 12. 16)

<표 6> 북한, 핵미사일 사용의도 분석

상황	의도	가능성 수준
정치·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	적화통일에 필요한 정치적 우위 확보	가능성 높음
군사적 도발과 핵사용 가능성으로 위협하여 경제회복수단으로 사용	경제회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체제유지 견고성 유지	가능성 높음
미국과의 직접적 협상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협박 등을 사용	미국과의 직접협상 채널의 공고화를 유도	가능성 높음
한국의 특정도시 등에 대한 재래식 공격 등을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핵 보유의 장점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4. 북한 SLBM 대응전략

가. 해상감시 및 수중공격능력 모색

북한이 위협하는 SLBM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달리, 잠수함을 이용해 수중에서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 추적,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SLBM 탑재 잠수함 기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를 출항하여 물속에 들어가면 한미 연합 대잠 전력을 활용하여 감시·추적함으로써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유사시 격침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한 대잠 전력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지만 NLL 이북에서 은밀하게 적 잠수함을 감시·추적하고 필요시 격파하는 작전에 있어서는 잠수함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다. 위성과 공중정찰 자산으로는 적 잠수함 잠항 후 위치추적이 제한되며 항공기나 수상함은 위치노출로 인해 적지중심작전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잠수함에 의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거부작전은 통상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① 탐지단계에서는 우군 잠수함이 적 SLBM 탑재 잠수함 모기지 인근해상에 은밀히 전개하여 수중에서 적 잠

수함에 대한 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한다. ② 추적단계에서는 적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 후 예상 발사지점까지 기동하는 동안 우군 잠수함이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③ 타격단계에서는 SLBM발사 징후 포착 시 적 잠수함을 공격하여 격파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SLBM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해역에서 잠수함 전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나. 한·미·일 군사협력체계 강화

북한 SLBM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굳건한 연합 방위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는 2014년 12월 29일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TISA)³¹⁾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이 약정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각자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우리의 감시능력을 보완하는 기본적인 협조시스템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일 간에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의 적시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은 군사보호협정(GSOMIA)을 맺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다,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2019년 8월 22일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함으로써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³²⁾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과 SLBM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일

31)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미일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약정으로서 군사보호협정과 달리 국가가 아닌 기관 간 체결된 약정으로 공유되는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관련 내용에 한정된다.

32)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기간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 서면으로 연장 여부를 통보한다. 2019년 11월 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되었다.

본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는 우리군의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한국은 군 정찰위성 도입과 이를 능동적으로 운용하여 적시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되므로 부족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의 전략정보가 긴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등 깊은 국민감정의 골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끊임없는 군사·외교적인 노력과 국민공감대 형성으로 한일 간 튼튼한 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위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III 결 론

해양 전략 중에서 잠수함은 해양 전략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전략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동북아에서 우리의 해양전략 개념은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와 해양통제전략이 되어야 하고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전쟁억제와 해양거부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양에서의 해양통제가 가능한 원해작전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전략 구현수단은 해양통제와 해양거부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잠수함전력의 확보 및 유지가 우리에게 전시에는 전승보장과 평시에는 전쟁억제를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개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SLBM은 우리의 해양전략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SLBM은 은밀성을 이용하여 접촉된 전선에서 화력을 통해 적을 소모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방으로 우회 침투하여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국가의 전쟁지속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략체계로서 국가의 존재성까지 잠식해버리는 무서운 무기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핵의 2격 공격 능력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은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능력과 해결전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가장근본적인 능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먼저 해양

감시체계와 수중공격능력을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구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협조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1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2차적으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핵 보유정책과 병행하여³³⁾ 핵 잠수함개발로 발전되어나가는 것만이 시기성과 함께 적절한 단계성을 고려하여 지금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에 적극적인 핵억제대응방법이라고 평가된다.

[논문투고일 : 2020.02.29]

[논문심사일 : 2020.02.14]

[논문수정일 : 2020.02.28]

[게재확정일 : 2020.03.06]

33) 전성훈, “전술핵 재배치로 한반도 핵균형시대를 열자”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17. 10. 24)

참 고 문 헌

『국방백서』 2016년

김보미,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 안정성” 『국가전략』 제22권 제3호, (2016).

권태형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경기도 성남: 북코리아, 2014).

문근식, “북한의 SLBM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해양안보포럼』 발표자료, (2016.8.29.).

문창환, “북한 SLBM 위협과 대응방향” 『STRATEGY 21』 통권40호, (2016, 겨울호).

박창권,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한구의 포괄적 대응전략” 『주간국방논단 1630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방호엽, “북한 특수전력의 운영특징 및 적용변화 연구: 핵·경제병진 전략과의 병합적 관계 모색” 『정보사 위탁과제』 (정보사령부, 2017).

전성훈, “전술핵 재배치로 한반도 핵균형시대를 열자”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17. 10. 24)

정영태외 6명,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INU 연구총서』 14-11,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 『KINU 연구총서』 18-4, (서울: 통일연구원, 2018. 12. 15).

하태영,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7년 가을)

동아일보 (2019. 12. 16)

연합뉴스, (2015. 05. 13 / 2016. 04. 25, 04. 26, 08. 24, 08. 25, 08. 26 /
2017. 09. 03 / 2019. 07. 31)

중앙일보, (2016. 04. 25, 04. 26, 08. 26)

조선중앙통신, (2013. 03. 27)

<http://38north.org> (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Vipin Narang and Ankit Panda,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What a Nuclear Launch Might Look Like" *War on the Rocks*, 15 September 2017.

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n SLBM Threat Substance and Strategic Intentions

Bhang ho yup

This paper analyzed the real North Korean SLBM threat and its strategic intention. North Korea's SLBM submarines are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it will come as a variety of threats at an early date that we don't think of. If North Korea, with its second nuclear attack capability, uses a covert nature to attack a nuclear missile with a SLBM submarine, its existence of Korea will disappear. Therefore, First, we must thoroughly build a marine surveillance system and underwater attack capability. Second, We should build a cooperative system that will not shake the Korea-US-Japan information sharing plan. And under these underpinnings, it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actual nuclear holding policy and the development and possession of nuclear submarines.

Key Words : SLBM, Submarine, Nuclear missile strategy, Nuclear state, Nuclear attack.

임진왜란기 용인 전투에서 참패(慘敗)한 이광(李洸)의 전투지휘능력 - 손자병법의 五事를 중심으로 -

이영석 *

- I. 문제의 제기
- II. 용인 일대의 지리적 특성과 전투 경과
- III. 임진왜란 시의 전황과 장수의 자질
- IV. 이광의 전투지휘능력
- V. 결론

* 한국의병연구소 소장, 군사학박사, dalmalee@naver.com

논문요약

1592년 4월 14일, 부산포에 상륙하자 대부분 지방 수령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다. 선조 또한 4월 30일 한성을 떠나 파천에 올랐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5월 3일 한성에 무혈 입성했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왜군에게 빼앗긴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 주장(主將)이 되어 군사를 모아 북상하여 용인 부근의 북두문산, 문소산 및 광교산에 일대에서 왜장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병력과 싸운 결과 대패했다.

오늘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일대에서 대패한 요인 중 하나로 지휘관 이광이다. 그의 전투지휘에 대해 손자병법의 오사(五事)를 토대로 고찰한 결과이다. 첫째, 지휘관인 이광은 도(道)의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라고 본다. 둘째, 천(天)의 측면에서, 적과 대치 시에는 호기를 파악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개 등 기상을 고려하지 않고 감행한 공격은 큰 화를 자초하였다. 셋째, 지(地)의 측면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작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예하 지휘관들이 정당한 건의를 하지만 이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넷째, 장(將)의 측면에서, 이광은 문신 출신이기에 병법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자기가 부족한 병법에 대해 무신 출신의 부하 지휘관들의 건전한 요구도 거부했다. 다섯째, 법(法)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 적절한 부대편성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주장(主將)인 이광(李洸)의 독선적 전투지휘로 용인 전투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 손자병법, 오사(五事), 용인 전투, 이광(李洸),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I. 문제의 제기

본 논문은 임진왜란 기간 중 왜군에게 참패를 당한 용인 전투에 대해 살펴본 다음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초에 있었던 이 전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학위논문은 전무하며 학술논문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¹⁾ 향후 용인 전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사 3대 패전 사례로 임진왜란 때 칠천량전투(漆川梁戰鬪, 1597.7.4~7.15),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雙嶺戰鬪, 1636.12.30~1637.1.3) 및 6·25전쟁 때 현리전투(縣里戰鬪, 1951.5.16~5.22)를 들고 있는데, 이 용인전투(龍仁戰鬪, 1592.7.12~7.14) 또한 이러한 전례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바 한국사 4대 패전 사례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사 3대 패전 사례와 용인 전투 등에 대한 자료와 연구 등이 매우 미흡한 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실패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족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자료의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패전 사례는 당시 조정이나 백성들에게 큰 수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들은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련 자료를 파괴했을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용인 전투에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추론한다. 셋째, 구체적인 전투상황 파악이 어렵다. 이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연구성과가 미흡하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넷째, 각 사료는 용인 전투에 참전한 조선군 현황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자료의 파괴나 은폐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당시의 이 전투에 대해 전하는 기록은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존해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고를 연구하는데 제한 사항이 많지만 1차 자료인 『간이집』,

1) 학술논문은,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전투에 대한 재고”, 『사총』 89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 2016.)가 유일하다. 단행본은, 이형석, 『임진전란사』(서울 : 신현실사, 19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서울 :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7.) 등이다.

『기재사초』, 『난중잡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손자병법』, 『송천유집』, 『신증동국여지승람』, 『일성록』, 『징비록』, 『회남자』 등과 최근에 연구된 『임진전란사』, 『임진왜란사』,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 전투에 대한 재고” 등을 토대로 당시 전투상황과 의미 등을 통해 이광의 전투지휘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즘 한반도를 중심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KADIZ,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한·일 간의 안보와 경제 갈등 증폭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지휘관(장수)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례를 통해 지휘관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진행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오사(五事)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오사란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군사문제는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생사와 존망이 걸린 곳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섯 가지 요건으로 국력의 기본을 경영하는 것이다. 오사란 첫째는 도(道), 둘째는 천(天), 셋째는 지(地), 넷째는 장(將), 다섯째는 법(法)이라’¹⁾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오사를 토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당시의 전황과 장수의 자질을 III장에서는 용인 일대의 지리적 특성, 용인 전투 참전자 현황 및 전투 경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용인 일대의 지리적 특성과 용인 전투 경과

1. 용인 일대의 지리적 특성

용인은 예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왕도(王都)와 인접하여서 빈객이 모여든다. 동쪽으로 양지현 경계까지 24리이고, 남쪽으로 양성현 경계까지 45리이며, 진위현 경계까지는 45리이다. 서편으로 수원부 경계까지 16리이며, 북쪽

1) 『손자병법』시계; 孫子曰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故 經之以五事 校之以計 而索其情. 一曰道 二曰天 三曰地 四曰將 五曰法.

으로 광주 경계까지 15리인데, 서울과는 65리의 거리이다.²⁾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은 할미산성과 처인성이 잘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할미산성은 경기도박물관의 시굴 조사를 통해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에 축조된 순수 신라 석축 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³⁾ 처인성(處仁城)은 용인현 남쪽 25리 지점에 있다. 고려 시대에 축성되었으며 흙으로 쌓았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버렸고 군창(軍倉)이 있다. 보개산의 봉수(烽燧)는 동쪽으로 죽산현 건지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광주 천천현에 응한다.⁴⁾

이같이 삼국 시대부터 용인은 군사적 요충지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오면서 무(武)보다 문(文)에 치중하다 보니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무너지기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체계가 무너진 이유로 왜란까지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것은 대군을 지휘하는 장수를 문신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병법의 기본인 것조차도 적용하지 않았다. 즉, 지형을 이용한 작전 구상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오늘날까지도 군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손자병법』에서도 강조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내가 나가도 불리하고 적이 나와도 불리한 곳을 지형이라 하니, 지형에서는 비록 적이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오히려 적을 유인하여 물러나 적으로 하여 반쯤 나오게 한 후 이를 공격하면 유리하다.⁵⁾

그러나 이광은 지형을 이용한 작전은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전투다운 전투도 하지 못하고 도망침으로써 참패를 당했다. 당시 용인 전투에 대

2) 『신증동국여지승람』10권, 용인현.

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14162&cid=51887&categoryId=53574>(검색일 : 2019.08.30.)

4) 『신증동국여지승람』, 앞의 책.

5) 『손자병법』지형 : 我出而不利 彼出而不利 曰支 支形者 敵雖利我 我無出也. 引而去之 令敵 半出而擊之利.

한 전황을 기록한 『선조실록』의 내용이다.

곽영(郭嶸)의 진영이 적의 침박(侵迫)을 받아 황망히 달아나자, 또 한 부대의 적이 동쪽에서 쫓아와서 갑자기 신익을 꺾박하니 모든 군졸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신의 진중에 상하가 아직 아침밥도 먹지 않고 군사들도 미처 정돈하지 못했는데 양진(兩陣)이 패전하여 흩어진 병졸들이 토붕와해(土崩瓦解) 되어 진영 앞으로 달아나 지나가기에 신이 경악을 금치 못하여 즉시 군관 10여 명으로 하여금 칼을 휘둘러 6~7명을 참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중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다만 군졸 두어 사람들과 진중에 외로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적의 예봉을 피해 행군하여 갈월에 이르렀습니다.⁶⁾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장에서 지휘관이 먼저 도망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대군을 지휘하는 장수를 임명할 때는 무엇보다도 병법에 능통한 자로 선발해야 하는데 선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신을 장수로 임명함으로써 용인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왜적이 접근하자 전투는커녕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지(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수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휘관 임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기대한다.

2. 용인 전투 참전자 현황

용인 전투사례를 연구하면서 병력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사료를 살펴보면 조선군 참전 현황에 많은 차이가 있다. 『선조실록』은 기병과 보병 포함 6만 명을⁷⁾, 『선조수정실록』은 4만 명을⁸⁾, 『난

6) 『선조실록』27권, 선조 25(1592)년 6월 28일 병진 : 而郭嶸之陣 爲賊所迫 奔遑出來 又一隊賊 自東邊逐來 奄迫申翌 連軍卒亦敢. 臣方在陣中 上下尙未朝食 軍兵未及整齊 兩陣潰散之卒 土崩瓦解 奔過陣前 臣不勝驚愕 卽令軍官十餘人 揮劍擊斬六七人 而猶不能止. 臣只與軍數人 獨立陣中 無可奈何 不得已退避賊鋒 行到葛院.

7) 『선조실록』27권, 선조 25(1592)년 6월 21일 기유 : 臣等率騎步及六萬餘人.

중잡록』은 13만 명을⁹⁾, 『간이집』은 4만 명을¹⁰⁾, 『일성록』은 10만 명을¹¹⁾, 『기재사초』는 6만 명을¹²⁾, 『송천유집』은 7만 명을¹³⁾, 『징비록』은 5만 명을¹⁴⁾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연구자료를 보면 이형석은 약 5만 명을¹⁵⁾,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는 약 4만여 명으로 주장한다.¹⁶⁾ 이러한 자료들을 도표화 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용인 전투에 참전한 조선군 현황

구 분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난중잡록	간이집	징비록
참전자	6만 명	4만 명	13만 명	4만 명	5만 명
구 분	일성록	기재사초	송천유집	이형석	국방부
참전자	10만 명	6만 명	7만 명	5만 명	4만 명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적게는 4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13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에 정확한 참전자 수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필자는 용인 전투에 참전했던 조선군 수를 10만 명으로 판단한다. 각 연구자 간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필자가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전하는 현황이다.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용인 전투의 참패 같은 것은 조정의 수치이기에 가능하면 줄이려고 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먼저 작성한 『선조실록』은 6만 명이고 뒤에 작성된 『선조수정실록』은 4만 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징비

8)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1592)년 5월 1일 경신 : 洸使節度使崔遠守本道 自領四萬兵.

9) 『난중잡록』1권 임진년 상 : 大軍皆會振威坪 凡十三萬.

10) 『간이집』1권, 全羅巡察使李洸發兵四萬 與防禦使郭嶸分領而北.

11) 『일성록』. 정조9년 : 慶尙監司金晬 全羅監司 李洸 忠淸監司 尹先覺 全羅兵使 郭嶸 三道十萬之兵到龍仁見倭而自潰.

12) 『기재사초』하권 : 慶尙道觀察使金晬 全羅道觀察使李洸 忠淸道觀察使尹先覺等 馳啓 曰 臣等率騎步僉從并六萬餘人.

13) 『송천유집』7권 : 又聞本道監司李洸率七萬兵到錦江.

14) 『징비록』 : 率軍官數十餘人來會 兵總五萬餘 至龍仁望見北斗山上.

15) 이형석, 『임진전란사』(서울: 신현실사, 1975), p. 327.

16) 국방부(1987), 앞의 책. p. 76.

록』에 대한 현황이다. 임진왜란 당시 병조판서, 도체찰사 및 영의정 등을 지낸 류성룡(柳成龍, 1542~1607년)이 저술한 관례로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시 선조와 대신들은 그에게 전란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거론하였고¹⁷⁾, 복인들의 탄핵으로 결국 실각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류성룡은 자기를 방어할 필요를 느끼고 『징비록』을 저술했다고 본다. 따라서 용인 전투와 같은 참패 사례는 되도록 정부의 공식기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함으로써 논란을 피하고 싶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난중잡록』 등을 포함해서 개인이 기록한 저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항간에 떠도는 말과 일부 참전자들의 개인 주장을 듣고 기록했다고 추론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상 많은 차이가 난다고 판단한다. 넷째, 『일성록』이다. 이 책은 영조 36년(1670년)부터 왕들의 행적을 편찬한 조선의 공식 기록물이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난 지 72년 만에 발간되었기에 당시의 정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필자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용인 전투에 참전한 조선군을 대략 10만 명으로 판단한다.

3. 용인 전투 경과

이광(李洸)이 지휘관으로 참전한 용인 전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자료의 제한으로 『난중잡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임진전란사』 등을 토대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광(李洸)은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도내(道內)의 병력 8천여 명을 지휘하여 공주까지 왔다가 선조가 파천했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갔다. 이를 1차 근왕(勤王)¹⁹⁾이라 하는데, 이후 무단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다시 기병과 보병 6만여 명으로²⁰⁾ 1592년 5월 20일 출병했다. 이때의 지휘관들은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睟, 1547~1615년), 전라도 관찰사 이

17) 『선조실록』42권, 선조 26(1593)년 9월 2일 계축：而量局偏狹 見識不明 與山海同在 相位 而不能救正其失 致國家滅亡 烏得免其責哉.

18) 장준호, “류성룡의 『징비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7), p. 20.

19) 왕실이 곤란에 처했을 때 병력으로 이를 구원하는 것을 이른다.

20) 『선조실록』27권, 선조 26(1592)년 6월 21일 기유：臣等率騎步及六萬餘人.

광,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尹先覺, 1543~1611년) 등으로 모두 문신들이었다. 특히 용인 전투의 주장(主將)은 이광이었다.²¹⁾ 그러나 그는 전라도 출신의 자기 직속 부하 외에 권율 등 다른 지역 장수(지휘관)들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광(李洸) 등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조정의 지시를 받아 왜군과 싸우려고 했다. 이는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신들이 기병·보병과 6만여 인을 거느리고 이달 3일에 수원에 진을 쳤는데 양천(陽川)과 북포(北浦)를 경유 하여 군사를 건너려고 합니다. 앞뒤 양쪽에서 들이치는 계책을 조정에서 급속히 지휘해 주소서.²²⁾

이해가 안 되고 참으로 한심한 지휘관들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최선의 방책을 결정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손자병법』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장수가 유능하고 임금이 간섭하지 않는 자는 이기니 이것이 승리를 아는 도리이다.²³⁾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오죽하면 사관들도 이광(李洸)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겠는가.

수 등이 올 적에 행군함에 규율이 없어 앞뒤가 서로 호응하지 못하였다. 선봉 백광언(白光彦)·이지시(李之詩) 등은 뿔나뿔하고 물을 건

21)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1592)년 6월 1일 기축 : 三道兵潰于龍仁 李洸等奔還本道. 三道諸將以洸爲盟主 議進軍 先擊龍仁屯賊.

22) 『선조실록』27권, 선조 25(1592)년 6월 21일 기유 : 慶尙道觀察使金睟 全羅道觀察使李洸 忠淸道觀察使尹先覺等馳啓曰. “臣等率騎步及六萬餘人 以本月初三日 陣于水原 欲由陽川北浦濟師矣. 腹背挾攻之策 請自朝廷急速指揮.

23) 『손자병법』모공 : 將能而君不御者 勝 此者 知勝之道也.

는 왜적 10여 급(級)을 참하고서 더욱 왜적을 경시하여 교만한 기색이 있었다. 수는 이미 누차 패전하여 수하에 군사도 없어 형세가 고단하고 기운이 꺾이었으며, 광은 본시 용렬하고 겁이 많아 계책을 세워 대응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조정에 명령을 청하여 진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²⁴⁾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휘하는 군사는 군기도 엄정하지 못했고 상호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난중잡록』은 약 13만여 명의 대군으로 깃발이 해를 가리고 군량을 운반하는 대열이 1백여 리에 달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행군 대열이 마치 피난민이 양 떼를 몰고 가는 것 같다²⁵⁾고 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정예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충청도 군(軍)은 온양에서 수원으로 직행했고 전라도 군(軍)은 수원과 용인의 중간 지점을 향해 북상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반기고 좋아했다.

선봉장 백광언(白光彦, ?~1592년)이 이광(李洸)에게 건의하기를, “우리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모두 열읍(列邑)에서 모아온 오합지졸에 불과한지라 그 병력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마시고 본읍의 수령들로 하여금 지휘관으로 삼고 모읍은 선봉이 되게 하고 모읍은 중군을 삼아 한곳에 몰려 있지 않게 10여 곳에 분산 배치하시면 비록 일진이 패한다 해도 옆 진이 따라 들어가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차(鱗次)²⁶⁾로 서로 지원하고 구하게 되면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패했다 해도 대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이광(李洸)은, “자네 소견과 나의 방책은 같지 않네.” 하면서 건의를 묵살(默殺)하고 군사를 모두 합쳐서 선봉(先鋒)과 중위(中衛)로 편성하여 작전을 강행했다.

24) 『선조실록』27권, 선조 25(1592)년 6월 21일 기유 : 倅等之來也 行軍無律 首尾不相應. 先鋒白光彦 李之詩斬賊之樵汲者十餘級 益輕賊有驕色. 倅既累敗 手下無軍 勢孤氣挫 洸本庸怯 不知所以策應 請命於朝廷 以爲進退之計.

25) 『난중잡록』임진년 상 : 大軍皆會振威坪 凡十三萬 旌旗蔽日 餽運百餘里 京湖避亂之人 誤恃驅羊之勢 或有還集者.

26) 생선 비늘과 같이 차례로 잇닿아 있다.

당시 왜군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1554~1626년, 이후 와키자카로 표기) 휘하에 수군 1천 6백여 명이 있었는데 주력 1천여 명은 한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나머지 6백여 명은 부장인 와키자카 자헤이(脇坂左兵衛, 이후 자헤이로 표기)와 와타나베 시치에몬(渡邊七右衛門, 이후 와타나베로 표기) 등이 거느리고 용인 부근의 북두문산과 문소산 등에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²⁷⁾

이광(李洸)의 군사들은 온양에서 4~5일 정도 주둔한 다음 6월 4일 전라도 군을 주력으로 삼아 용인의 남쪽 10리 지점에 이르렀다. 이때 북두문산 위에 왜군의 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광은 곽영에게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곽영(郭嶸, ?~1592년)이, “왜적은 이미 험한 곳에 진지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공격하기에 매우 불리하고 한성은 이미 적의 수중에 있기에 한 도의 병마를 모조리 이끌고 오신 공의 일거일동(一舉一動)은 나라의 존망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적은 수의 왜군과 싸워서 혹시 권위를 실추하게 되면 대사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때야 말로 자중하시고 한강을 온전히 건넌 다음 임진강을 방어한다면 저절로 서로(西路)가 막히고 양도(糧道)²⁸⁾ 또한 확보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군사를 훈련 시키고 적정을 살피면서 행재소의 분부를 기다림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광(李洸)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만을 고집하였다. 곽영은 할 수 없이 선봉장인 백광언에게 공격로를 정찰하게 했다. 백광언이 정찰을 마치고 귀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기를, “전방에는 언덕과 숲이 우거지고 길도 매우 협소하여 많은 병력의 작전에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하자 이광이 크게 화를 내면서 끝내 전군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곽영과 백광언은 무신이기에 전술적으로 합당한 건의를 했다고 본다. 『손자병법』은 또한 이런 상황에 직면 시 주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터에 임해 적과 마주함에 있어서 산을 넘을 때는 계곡을 따르고, 살 곳을 살펴서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높은 곳에 있는 적과 싸우려

27) 이형석(1975), 앞의 책, p. 328.

28) 군량을 나르는 길로 지금의 보급로를 이르는 말이다.

올라가지 말 것이며 이는 산악에서의 전투 요령이다.²⁹⁾

곽영은 불만을 표하면서 군사들을 통제하여 무성한 숲속으로 공격했다. 그는 백광언을 선봉으로 삼아 앞장서 가다가 나무와 물을 구하러 나온 왜군 10여 명을 참살하였다. 이에 군사들은 자신을 가지게 됐으며 왜군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생겼다.

6월 4일 밤, 자신감이 생긴 백광언은 야간 공격을 결정했다. 본인이 진두지휘하며 적진으로 쳐들어가 누책(壘柵)³⁰⁾을 넘어 왜적 10여 명을 또다시 참살했다. 그런데 안개가 심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왜군들은 도망쳤고 왜장 자헤이는 바로 한성의 본대에 긴급하게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³¹⁾

6월 5일 이광은 용인의 북쪽에 위치한 문소산의 왜군을 공격하기로 했다. 이에 백광언이 적정을 탐지한 결과 적의 기세가 상당하고 지형도 험하고 어제의 전투로 왜적을 얹잡아 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광에게 건의를 다시 했다. “적은 수가 많지 않으니 급히 쳐서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자 이광은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 이어서 권율이, “소수의 적이라 하여도 가볍게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중위군이 따라 나가는 것을 기다려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봉장 이지시(李之詩, ?~1592년)의 군사만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했으나 이광은 이를 듣지 않고 이지시에게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군사가 많은 것을 알고 그들의 오직 구원병만을 기다리며 10:00시 경까지 최대한 전투를 회피했다.

한편 용인의 전황을 보고 받은 와키자카는 바로 그의 부장인 야마오카 우콘(山岡右近)을 전위로 하여 구원병을 이끌고 한성을 떠나 용인으로 향했다. 이들은 11:00~13:00시 어간에 이미 북소산 부근에 도착하여 진지 내에 있던 왜군과 기치(旗幟)로 서로 연락을 취하자 왜군의 사기는 충천했고 구원병과 서로 호응하며 책문(柵門)을 열어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반면 아군은 전투대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백광언과 이지시가 선봉에

29) 『손자병법』행군：處軍相敵 絕山依谷 視生處高 戰隆無登 此 處山之軍也.

30) 작은 성 모양의 울타리.

31) 이형석(1975), 앞의 책, pp. 329-330.

서 지휘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적진 동쪽 산속에서 각양각색의 깃발이 휘날리더니 나각(螺角)과 금고(金鼓) 소리 그리고 군사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듯 울리자 조선군은 서로 도망치기 시작하자 인마가 뒤엉켜 큰 혼란이 생겼다.

백광언이 칼을 빼 들고 마상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진정을 시키려고 했으나 오합지졸로 한 번 무너진 대오는 막을 수 없었다. 이런 호기를 틈타 왜군은 구원병과 문소산의 군사들이 합동으로 조총을 발사하면서 공격해 오자 조선군은 더욱 혼란에 빠져서 서로 밟고 밟히는 아수라장이 됐다. 10만 명의 군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한순간에 무너졌다. 진두지휘 하던 백광언, 이지시, 고부군수 이광인(李光仁, ?~1592년), 함열현감 정연(鄭淵, ?~1592년) 등이 전사했다.³²⁾

이 전투로 조선군은 패해서 먼저 도망친 군사들로 하여금 이광의 부대에 긴급 편성을 했다. 이들은 16:00 시 경 광교산 서쪽까지 도망하여 숲이 우거지고 전방 관측이 되지 않는 곳에 진지를 편성했다.

충청도 군은 수원으로 진출 후 왜군을 격퇴한 다음 상호 지원을 하려 했으나 이들이 싸우지 않고 4일 용인 방면으로 이동한 관계로 이들 역시 진로를 바꾸어 전라도 군과 합류하여 같은 곳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패전으로 군사들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됐으며 밤에는 공연히 놀라서 소리치는 자들도 있었다.

6일 아침 이광은 명령을 내리기를 모두 동시에 아침밥을 먹게 했다. 이때 말을 탄 왜군이 불시에 기습을 감행하니 아군은 무방비 상태라 큰 혼란이 생겼다. 더구나 왜군 선두에는 5명 정도가 금가면을 쓰고 백색교룡기(白色蛟龍旗, 흰색 용이 그려진 깃발)를 짙어진 채로 대검을 휘두르면서 뛰쳐나오자 조선군은 귀신으로 여기고 도망만 쳤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경계도 하지 않고 방심한 탓으로 생긴 것이다.

더구나 충청병사 신익(申翼, ?~?)이 먼저 도망치자 그 휘하의 병사들도 일시에 흩어지고 부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군 1천여 명이 기마병의 뒤를 이어 들이닥쳤다. 이들은 괴상한 가면을 쓰고 함성을 지르며 조총을 쏘고 창칼을 휘두르니 조선군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했다. 왜군은

32) 이형석(1975), 앞의 책, p. 330.

쓰나미가 도망치는 자들을 뒤쫓았다. 조선군은 서로 도망치려고 허둥대다가 인마에 서로 밟히고 짓이겨져서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임금이 내린 교서는 물론 가지고 있던 무기도 버리고 오직 도망치고자 했다. 이광 또한 군사를 재편할 엄두도 못하고 평북으로 갈아입고 도망쳤다. 왜군은 이들을 쫓아 10여 리를 추격하다가 되돌아가면서 아군이 버린 각종 유기품을 모아 전부 소각했다.

그나마 권율만이 군사들을 온전히 이끌고 퇴각했다. 용인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광은 전주로, 권율은 광주로, 이경복은 나주로, 윤선각은 공주로, 김수는 경상도로 물러났다.³³⁾

10만여 명의 군사들은 불과 1천 6백여 명에 불과한 왜군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 패배로 인해 조선은 평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Ⅲ. 당시의 전황과 장수의 자질

1. 당시의 전황

왜군은 1592년 4월 13일 조선을 공격하여 다음 날인 4월 14일에 부산진을 점령한 후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4월 15일에는 동래성을, 16일에는 밀양성을, 19일에는 언양 등을 차례로 점령하며 한성으로 향했다. 이를 저지하고자 조정에서는 조선 최고의 장수인 이일(李鎰, 1538~1601년)과 신립(申砮, 1546~1592년)을 참전시켜 왜군을 물리칠 계획이었지만, 이일은 4월 25일 상주에서 대패한 후 홀로 도망쳤고, 신립은 4월 28일 탄금대에서 대패하자 남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³⁴⁾ 급박(急迫)한 상황이 되자 선조는 4월 30일 선조는 몽진(蒙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선조실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날 큰비가 종일 내렸다. 상과 동궁은 왕의 말을 타고 중전 등은 집

33) 이형석(1975), 앞의 책, pp. 330-331.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서울 :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7), pp. 34-53.

같이 만든 가마를 탔었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숙의(淑儀)³⁵⁾ 이하는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다. 종친과 문무관이 호종하는 수가 1백 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음식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먹을 음식도 없었다.³⁶⁾

이같이 선조와 그를 호종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왜군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난에 급급했고, 왜군은 선조를 잡기 위해 한성을 향해 북상했다. 왜군의 파죽지세에 놀란 조선군은 그들을 신병(神兵)으로 여겼으며, 그들이 휴대한 조총을 귀신의 무기라고 무서워하며 싸우기보다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수령(守令)들과 장수들은 왜군이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백성과 고을을 두고 앞서 도망쳤다. 백성들은 의지할 곳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부왜(附倭)³⁷⁾하거나 왜군으로부터 갇은 만행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왜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텅 빈 한성에 5월 3일 무혈입성하였다. 왜군은 한성을 점령하면 선조를 포로로 잡거나 항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으나 선조가 한성을 떠남으로써 이들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후속 부대의 도착을 기다리며 한성에서 부대를 정비한 다음 계속 선조를 쫓아 북상하였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선조는 왜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명나라 쪽을 향해 5월 1일에는 개성에, 6일에는 황주에, 7일에는 평양에, 6월 15일에는 박천에, 6월 16일에는 정주에, 6월 18일에는 선천에, 6월 19일에는 거련에, 6월 20일에는 용천에, 6월 21일에는 의주에 도착하였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도(道)를 중시하는 국가였다. 『손자병법』은 도(道)에 대해,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과 뜻을 같이하며, 함께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여,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⁸⁾ 그러나 선조는 도(道)와는 거리가 멀었다.

35) 왕의 후궁에게 내린 작호로서, 품계는 종2품이다.

36) 『선조실록』26권, 선조 25(1592)년 4월 30일 기미 : 是日 大雨終日 上及東宮御馬 中殿御屋橋 淑儀以下到洪濟院 雨甚 舍輜乘馬 宮人皆痛哭步從 宗親 文武扈從者 數不滿百 晝點于碧蹄館 僅備御廚 東宮則闕膳.

37) 왜군에 붙어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

평양 군인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몽둥이로 궁비(宮婢)를 쳐 말 아래로 떨어뜨렸으며, 호조 판서 홍여순(洪汝淳)은 길에서 난병(亂兵)을 만나 맞아서 등을 다쳐 부축을 받고 돌아왔다. 거리마다 칼과 창이 삼엄하게 벌여 있고 고함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는데 전부 대가(大駕)가 성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 하였다.³⁹⁾

상기 사례와 같이 백성들 또한 왕을 포함하여 대신들을 도(道)로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다. 선조를 포함하여 당시의 대신과 지방 수령들은 국난을 해결하고 백성을 구하기보다는 자신과 처자식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같다.

이각(李珣)은 병영으로 급히 돌아와서 먼저 제 첩을 피란시키니 성안의 인심이 흉흉해졌고 이각이 새벽에 도망치니 많은 군사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적은 길을 나누어 휘몰아 와서 여러 고을을 잇달아 함락시켰으나 한 사람도 막는 자가 없었다. 김해부사 서예원(徐禮元)이 성문을 닫고 지키고 있었는데...(중략) 성을 넘음으로 인해 초계군수 이모는 먼저 도주해 버렸으며 서예원도 도망치니 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⁴⁰⁾

위의 사례와 같이 선조는 물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 살기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료가 전하고 있다. 조선의 국가 이념인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도(道)와도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수찬 임몽정(任蒙正)은 하루 먼저 도망갔으며, 정언 정사신(鄭士信)은

38) 『손자병법』시계 : 道者 令民 與上同意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民不畏危也.

39) 『선조실록』27권, 선조 25(1592)년 6월 10일 무술 : 平壤軍民等作亂 以杖擊墜宮婢于馬下 戶曹判書洪汝淳 路遇亂兵 被歐傷背 扶曳而還. 街巷之間 劍戟森羅 鼓噪震地 皆願大駕勿得出城.

40) 『징비록』 : 李格奔還兵營 先出其妾 城中洶洶 李珣乘曉 亦脫身遁 衆軍大潰 賊分道長驅 連陷諸邑 無一人拒者 金海府使 徐禮元 閉門城守 因踰城 草溪郡守李某先遁 禮元繼出城遂陷.

도성 서남쪽에 와서 도망쳤고, 지평 남근(南瑾)은 연서에 와서 도망쳤으며, 그 나머지 낭서(朗署)⁴¹⁾와 여러 관사는 제멋대로 흩어져서 갔다. 산반(散班)⁴²⁾과 외신(外臣)⁴³⁾은 한 명도 따르는 자가 없었다. 평양에 이르러 대사성 임국로는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이조 좌랑 허성(許箴)은 군사를 모집하겠다고 핑계를 댔다. 판서 한준(韓準), 승지 민준(閔濬), 참판 윤우신(尹又新)은 서로 잇따라 흩어졌고, 노직(盧稷)은 영변에서 뒤로 처지다가 도망쳤다.⁴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은 위와 유사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솔선수범해야 할 인사들의 행동이 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면 임진왜란 시 용인 전투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광(李洸, 1541~1607년)을 도(道)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생애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광은 1586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⁴⁵⁾에 올라 함경도 관찰사 겸 순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재임 중 당시 귀양 온 사람들의 사면을 요청하였다가 체직(遞職)⁴⁶⁾ 되었고⁴⁷⁾, 1589년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이해 겨울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생겼을 때 임금이 명하여 정여립의 문생과 도당을 모조리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광이 경중을 잘 가려 각 읍에 수감 시킨 다음 먼저 중한 자를 거론하여 상문(上聞)⁴⁸⁾하고, 옥사가 끝날 무렵 죄가 가벼운 자들을 거론하면서 의심할 만한 실상이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모두 석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발된 자들 역시 체포하지 못한 일이 없어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⁴⁹⁾

41) 각 관아의 당하관을 이르는데 조선 시대 관리들의 품계 가운데 정3품 이하 종9품까지이다.

42)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아치.

43) 외국의 사신.

44)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1592)년 6월 1일 기축 : 修撰任蒙正先一日逃去 正言鄭士信到城西南奔 持平南瑾到延曙而走 其餘郎署 百司任意散去 散班 外臣無一人從者 至平壤 大司成任國老托以母病 吏曹佐郎許箴托以招募 判書韓準 承旨閔濬 參判尹又新相繼散去 盧稷自寧邊落後亡去.

45) 조선 시대 문관(文官)으로 종2품.

46)遞任과 같은 말로 그 직책에서 해임함을 의미한다.

47) 『선조실록』2권, 선조 21(1588)년 윤6월 4일 을유 : 咸鏡監司 以道內蒙赦人放送啓本.

48) 임금께 드리는 말.

이 같은 행동은 유학에서 이르기를, 도(道)는 인간의 이해를 위한 접근이며 생활 규범으로서 당위성을 문제 삼는 데 있다. 이 당위성의 행위 목표가 곧 유학적 사상의 이론적 핵심을 이루고 있다. 유학에서 인간의 생을 문제 삼는 것은 참사람 즉 본 모습으로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하고 의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⁵⁰⁾

이광은 귀양 온 자나 반역을 도모한 자일지라도 그 죄가 경미 하고 도(道)에 견주어 억울한 자가 있으면 자기에게 닥칠 화까지도 감내하면서 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회를 위해 도(道)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본다.

2. 이광의 생애와 장수의 자질

가. 이광(李洸, 1541~1607년)의 생애

이광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1541년 12월 8일 외갓집인 전라도 고부군 우일향에서 태어났다.⁵¹⁾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雨溪)이다. 1567년 생원시에, 1574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성균관, 예문관, 춘추관 등의 직임을 거쳐 병조좌랑에 재임 중 병조의 업무를 잘 처리해서 신임이 두터웠다. 1583년 북청 판관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함경도 도사(都事)⁵²⁾에 올랐다. 임기가 끝났으나 상관의 요청으로 유임되었다. 이후 기근이 발생하여 황폐해진 북방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구황어사(救荒御史)⁵³⁾로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3년 만에 조정으로 돌아온 뒤 통정대부(通政大夫)⁵⁴⁾에 올라 또다시 북방의 지

49) 『선조수정실록』24권, 선조 23(1590)년 3월 1일 임인 : 逆變初起 上命方伯 盡捕汝立門生 徒黨. 洸辨別輕重 繫保各邑 先舉其重者上聞 而獄事垂竟 方舉其輕者 言其無可疑狀 皆得蒙釋. 凡所被告者 亦無失捕 人情大安.

50) 김원갑, “孔子的 道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5), pp. 79-98,

51)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D%B4%EA%B4%91\(%E6%9D%8E%E6%B4%B8\)](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D%B4%EA%B4%91(%E6%9D%8E%E6%B4%B8))(검색일 : 2019.8.28)

52) 조선 시대 때 감영의 종5품 벼슬로 감사의 다음가는 벼슬이다.

53) 기근이 들었을 때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도에 파견하는 어사를 이른다.

방관인 강계 부사에 임명되었다가 영흥 부사로 바뀐 뒤 이듬해 길주 목사가 되었다. 1586년 여름에는 가선대부로 품계가 올라 함경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는데 여진족들의 소요 제압을 잘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 그는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 중, 귀양 온 이들의 사면을 요청하였다가 체직되었다가 3년 후 1589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해 겨울 정여립의 역모 사건으로 연관된 자들이 도망쳐 숨어들었다. 이에 죄인을 찾아 체포하는 한편,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 힘썼기에 호남 인심이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1590년 논핵(論劾)⁵⁵⁾을 받고 체직되었으나 이듬해 호조참판으로 다시 기용된 지 얼마 후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⁵⁶⁾에 올라 전라도 관찰사를 겸임하였다.⁵⁷⁾

1592년 임진왜란 중 두 번째로 군사 10만 명을 지휘하여 왜군과 맞서 싸웠으나 용인 전투에서 참패했다. 후에 광주 목사 권율(權慄, 1537~1599년)과 함께 웅치(熊峙)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인 전투의 패전을 이유로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백의종군했다. 이후 패전을 이유로 의금부에 투옥,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가, 1594년 석방되어 고향인 전라도 고부로 돌아와 1607년 1월 19일 사망했다.⁵⁸⁾

나. 이광(李洸)의 장수로서 자질

이광(李洸)의 장수 자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특히 동양 최고의 고병서인 『손자병법』은, 장수의 자질이란 국가의 생사와 존망이 걸린 것이 군사라고 하면서 이를 지탱하는 것이 다섯 가지라고 주장한다. 이중 장수의 중요성을 네 번째로 거론하고 있다.

54) 조선 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

55) 죄과나 허물을 이유로 탄핵하다.

56) 조선 시대 중추부의 정2품 관직.

57) 김경태(2016), 앞의 논문, pp. 4-5.

5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4161&cid=40942&categoryId=33383>
(검색일 : 2119.8.28)

장수의 요건이란 지혜, 신의, 인애, 용기 및 엄정함이다. 대체로 장수들이 듣지 않았을 리 없으니, 이것을 잘 아는 자는 승리하고 잘 모르는 자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⁵⁹⁾

위의 사례와 같이 장수는 지혜, 신의, 인애, 용기와 엄정함이 필요한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혜는 전술에 밝고 적의 허와 실을 잘 판단하는 것이다. ② 신의는 진실하고 속이지 않으며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③ 인애는 병졸들을 사랑하고 아껴 잔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④ 용기는 과감하게 전투에 서서 적진을 쳐부수는 것이다. ⑤ 엄정함은 군정(軍政)을 바로 잡고 명령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다.⁶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광(李洸)이 지휘관으로 참전한 용인 전투의 상황에 대해 윤선각(尹先覺, 1543~1611년)의 치계(馳啓)⁶¹⁾는 다음과 같다.

보덕(輔德) 심대(沈岱)를 파견하여 양남(兩南)⁶²⁾의 근왕병을 징발하여 와서 구원하게 하였는데 이르지 않았다. 이때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오다가 공주에 이르러 경성이 벌써 함락되고 대가가 서쪽으로 거동⁶³⁾했다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병사들을 철수하여 본진으로 돌아갔다.⁶⁴⁾

예컨대, 당시 용인 전투에 참전했던 이광은 지혜, 신의, 인애, 용기와 엄정함 등은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근왕을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출병했는데 왕이 파견했다고 하여 임의로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간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더더욱 왕이 파견했음을 알면 더 적극적으로 왕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에 대해

59) 『손자병법』始計：將者 智信仁勇嚴也。凡此五者 將莫不聞 知之者勝 不知者不勝。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무신수지』(서울 : 교학사, 1986), pp. 15-16.

61) 파발보고서.

62) 영남과 호남을 이른다.

63) 임금의 행차를 말한다.

64)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1592)년 5월 3일 임술：遣輔德沈岱 徵兩南勤王兵入援 不至。時 全羅道觀察使李洸 領兵入援 行到公州 聞京城已陷 大駕西幸 遂撤兵還鎮。上日望南軍之來 杳無聲息。忠清道觀察使尹先覺 亦不來 嘆慨久之..

승정원의 회계(回啓)⁶⁵⁾에서도 ‘이광이 되돌아간 일은 괴이하다’⁶⁶⁾고까지 했다.

『손자병법』은 전투가 발발하면 다양하고 긴박한 여러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장수의 수많은 변화의 이점에 통달하면 용병법을 잘 아는 것이요, 장수가 변화의 이점에 통달하지 못한다면 비록 지형 분석을 했다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형이 주는 이점을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장수가 구변의 이점에 통달하지 못한다면 비록 지형을 안다 해도 지형의 이점을 능히 얻지 못할 것이요, 군대를 운용함에 구변의 활용법을 모른다면 비록 몇 가지의 이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군사력 운용의 요체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⁶⁷⁾

위와 같이 장수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광(李洸)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장수로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이 부족했던 인물 같다. 물론 문신 출신으로 10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의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자질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장수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65) 임금의 질문에 신하들이 대답하는 것.

66)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1592)년 5월 12일 신미 : 李洸下歸之事 則可怪.

67) 『손자병법』구변 : 故 將通於九變之利者 知用兵矣. 將不通於九變之利者 雖知地形 不能得地之利矣. 治兵 不知九變之術 雖知五利 不能得人之用矣. 是故 智者之慮 必 雜於利害.

IV. 이광의 전투지휘능력

용인 전투에서 패배한 이광(李洸)의 전투지휘능력에 대해 『손자병법』의 오사(五事)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사란 사란 첫째는 도(道), 둘째는 천(天), 셋째는 지(地), 넷째는 장(將), 다섯째는 법(法)이다.

첫째, 도(道)의 측면이다. 『회남자』는 도(道)에 대해 이르기를, ‘도(道)는 하늘을 덮고 땅을 싣는 것으로 둘레가 사방팔방 무한대로 펼쳐진다. 그 높이는 가늠할 수 없고 그 깊이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천지를 싸서 포용하고 무형의 만물에 형체를 준다. 물이 원천(源泉)에서 흘러 적시면 빈 곳을 서서히 적신다. 샘솟는 물이 철철 흐르면 처음엔 혼탁하더라도 점차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도를 심으면 천지에 가득하고 옆으로 퍼면 온 누리에 두루 미친다. 배품이 무궁하여 조석으로 무한하다. 펼쳐놓으면 천지사방을 덮고 말면 차지 않고 한 줌도 안 된다’⁶⁸⁾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무한하고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이런 흐름을 알고 적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자병법』은 ‘도(道)에 대해 백성들로 하여금 위와 뜻을 같이하여 가히 함께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며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⁶⁹⁾고 주장한다. 이같이 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이는 노자, 공자 및 손무이다. 이들은 동시대 사람들이기에 사제 관계가 아닌 이상 누가 누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 사람 공히 태고의 도라고 지칭하는 주역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은 주역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유가의 오경(五經)에 주역이 포함되는 이유도 공자가 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손무도 주역은 물론 한세대 앞선 노자의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⁰⁾

68) 『회남자』: 夫道者 覆天載地 天覆地載 廓四方 析八極 高不可際 深不可測 包裹天地 稟授无形 原流泉淳 冲而徐盈 混混淆滑 濁而徐清 故 植之而塞于天地 橫之而彌于四海 施之無窮而无所朝夕 舒之悞于六合 卷之不盈于一握.

69) 『손자병법』시계: 道者 令民 與上同意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民不畏危也.

70) 지종상, “손자병법의 구조와 체계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6), pp. 56-57.

조선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기에 문인 출신인 이광(李滄)은 이러한 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용인 전투 전의 행적은 그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1586년에 함경도 관찰사 겸 순찰사로 재임 시 당시 귀양 온 사람들의 사면을 요청하였다가 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1589년에는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발생하자 도망쳐 숨은 죄인을 찾아 체포하는 한편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사람들을 힘써 도운 결과 호남 인심이 안정되었다. 따라서 이광은 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인물이라 하겠다.

둘째, 천(天)의 측면이다. 천의 의미는 ① 하늘이 부여한 호기, ② 기후나 천후(天候), ③ 때, 시간 등 세 가지가 포함되지만 대부분 ①을 간과한 채, 오직 ②와 ③의 의미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하늘이 내린 호기’나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주로 전쟁에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주변 정세나 여건이며 그것들을 주로 주변 제후와의 관계에서 조성된다.⁷¹⁾고 주장한다.

이는 ①항의 ‘하늘이 부여한 호기’는 이광은 용인 전투에서 호기를 포착하지 못했다. ②항인 기후나 천후 측면에서도, 안개라는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전한 결과 결국 대패하는 빌미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4일, 자신감이 생긴 백광언은 야간 공격을 위해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적진에 들어가 왜군 10여 명을 참살했으나 안개가 심해져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왜군은 안개를 이용하여 도망쳐 한성에 있던 왜장 와키자카에게 급보를 전했다. 이 전황을 보고 받고 왜장은 바로 자신이 병력을 인솔하여 용인으로 출병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광은 천을 도외시하고 작전을 시행함으로써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호기도 포착하지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전장의 최고 책임자인 이광이 병법을 잘 알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셋째, 지(地)의 측면이다. 『손자병법』은 지에 대해, ‘거리의 멀고 가까움, 지세의 험하고 평탄함, 그리고 지형의 넓고 좁음, 위험과 안전’⁷²⁾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백전기법』은, ‘적과 대적할 때는 지형상 유리한 지점을 먼저 점령해야 한다.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적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

71) 지종상(2016), 위의 논문, pp. 106-107.

72) 『손자병법』시계：地者 遠近 險易 廣狹 死生也.

다. 만일 적군이 먼저 그 지역을 점령해서 아측의 공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어로 전환하여 굳게 지키면서 적에게 변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하여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⁷³⁾는 것이다.

이는 유리한 지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광영은 무신이기에 이를 알고 이광에게 건의를 했을 것이다. “왜적은 이미 험한 곳에 진지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공격하기에 매우 불리하고 한성은 이미 적의 수중에 있기에 한 도의 병마를 모조리 이끌고 오신 공의 일거일동은 나라의 존망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만전을 기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광은 그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무경칠서』에도 용인 전투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협착한 진입로, 험준한 도로와 산악, 요새 지역 등을 선택 결정하여 10인의 병력으로도 1천여 명의 적 대부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⁷⁴⁾고 적시하고 있다. 고병서는 이같이 지형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광은 이를 몰랐던 것 같다.

광영은 자신의 건의가 무산되자 선봉장인 백광언에게 공격로를 정찰시켰다. 정찰을 마친 백광언은 “전방에는 언덕과 숲이 우거지고 길도 매우 협소하여 많은 병력의 작전에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하자 이광이 크게 화를 내면서 끝내 진군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손자병법』은 지형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무릇 지형은 용병에 있어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적을 알아 승리할 방도를 계획하며 지형의 험하고 평탄함과 지리의 멀고 가까움을 계량하는 것이 최고사령관이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알고 전쟁을 수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를 모르고 전쟁을 수행하면 반드시 패한다.⁷⁵⁾

위의 사례와 같이 이광이 병법을 알았다면 대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전기법』(서울 : 유풍인쇄주식회사, 1985), p. 72.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무경칠서』(서울 :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7), pp. 89-90.

75) 『손자병법』지형 : 地者 遠近 險易 廣狹 死生也. 夫 地形者 兵之助也 料敵制勝 計險 阨遠近 上將之道也. 知此而用戰者 必勝 不知此而用戰者 必敗.

넷째, 장(將)의 측면이다. 『손자병법』은 장수의 요건에 대해 지혜, 신의, 인애, 용기, 위엄⁷⁶⁾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병(走兵), 이병(弛病), 함병(陷兵), 붕병(崩兵), 난병(亂兵), 배병(北兵)’이 있는데, 무릇 이 여섯 가지 잘못은 천지라는 자연현상 때문이 아니라 장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① 여건이 비슷한데 1로써 10을 공격하면 주병이오, ② 사졸들이 강하고 간부들이 유약하면 이병이오, ③ 간부들이 강용하고 사졸들이 겁약하면 함병이라 한다. ④ 장수들이 성을 내며 통제에 불복하고 적을 만나면 다투듯이 제멋대로 싸우는데, 지휘관이 그들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붕병이라 한다. ⑤ 장수가 약하여 위엄이 없고, 가르침이 명백하지 못하며, 장병들에게 일정한 절제가 없고, 전투대형이 종횡으로 어지러운 것을 난병이라 한다. ⑥ 장수가 적을 잘 헤아리지 못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과 싸우게 하고,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을 공격하게 하여, 정예한 선봉 부대가 남아나지 않는 것을 배병이라 한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패배하는 길로서 장수의 중대한 업무 분야이니 신중히 살펴야 한다⁷⁷⁾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연구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오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수의 중요성이라고 확신한다. 장수의 순간적 판단이 승패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용인 전투의 실패는 가장 기본적인 병법조차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인 전투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최고 지휘관인 이광의 무능이다. 둘째, 6일 경계병도 없이 아침 식사를 전원 동시에 함으로써 왜군의 기습을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 셋째, 권율은 물론 예하 지휘관들의 건의를 대부분 무시했다. 넷째, 5일 저녁에 광교산 서쪽까지 패퇴한 후 숲이 우거지고 전방 관측이 되지 않는 곳에 진지를 편성한 점이다. 다섯째, 군사를 모집한 후 군사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여섯째, 전술적 행동 없이 10만 대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함으로써 6배보다 적은 왜군에게 참패를 당했다고 진단한다.

76) 『손자병법』시제 : 將者 智 信 仁 勇 嚴也..

77) 『손자병법』지형 : 兵 有走者 有弛者 有陷者 有崩者 有亂者 有北者. 凡 此六者 非天地之災 將之過也. 夫勢均 以一擊十曰 走 卒強吏弱曰 弛 吏強卒弱曰 陷. 大吏怒而不服 遇敵懟而自戰 將不知其能曰 崩. 將弱不嚴 教道不明 吏卒無常 陳兵縱橫曰 亂. 將不能料敵 以少合衆 以弱擊強 兵無選鋒曰 北. 凡 此六者 敗之道也 將之至任 不可不察也.

다섯째, 법(法)의 측면이다. 『손자병법』은 이에 대해, 曲制, 官道, 主用으로 곡제는 군의 편성과 조직, 관도는 군율을, 그리고 주용은 군량과 군수지원⁷⁸⁾ 등이라고 한다. 본 항에서는 군대의 편성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병력을 차출하다 보니 애초 정예군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죽했으면 양 떼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고 했겠는가? 더구나 효율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 부대를 재편성할 것을 백광언이 다음과 같이 건의를 했다. “우리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모두 열읍에서 모아온 오합지졸에 불과한지라 그 병력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마시고 본 읍의 수령들로 하여금 지휘관으로 삼고 모습은 선봉이 되게 하고 모습은 중군을 삼아 한곳에 몰려 있지 않게 10여 곳에 분산 배치하시면 비록 일진이 패한다 해도 옆 진이 따라 들어가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차로 서로 지원하고 구하게 되면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패했다 해도 대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으나 이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예하 지휘관들이 건의한 부대편성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그 지역 출신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지휘관으로 삼았다면 대패는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다.

임진왜란 초에 있었던 용인 전투에 대해 『손자병법』의 오사와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최고 지휘관인 이광(李洸)은 문신 출신답게 도의 측면에서는 합당한 인물이었지만 전투를 수행하는 장수로는 천(天), 지(地), 장(將) 및 법(法)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용인 전투의 참패는 최고 지휘관인 이광의 독선적인 부대 운영이 자초한 결과라고 본다.

78) 『손자병법』시계 : 法者 曲制 官道 主用也.

IV. 결 론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임란 초에는 지방 수령들이 도망함으로써 선조는 몽진하여 의주까지 갔다. 특히 임란 초에는 연전연패의 상황이었지만 용인 전투의 패배는 평양을 포기할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용인 전투의 최고 지휘관인 이광의 전투능력을 『손자병법』의 오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道)의 측면에서는 이광은 도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천(天)의 측면에서는, 최고 지휘관으로 적과 전투 시에는 호기를 판단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승기를 잡아 이를 승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기상의 고려는 병법의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고 공격한 결과 결국 참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셋째, 지(地)의 측면이다. 이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작전을 시행해야 하는데 용인 전투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예하 지휘관들이 합당하고 건전한 건의를 했지만, 그는 대부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넷째, 장(將)의 측면이다.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광은 문신 출신인 관계로 병법을 잘 알지 못했음이 사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문신 출신인 부하 지휘관의 올바른 건의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게 결정적 참패 원인으로 본다.

다섯째, 법(法)의 측면이다. 이광은 부하 지휘관들이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 적절한 부대편성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경제 갈등 등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계 또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을 포함하여 전작권 환수 등 많은 다툼이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용인 전투가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전기전술에 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지휘관 양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둘째, 유사시에 대비한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통해 정예군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장교를 포함해서 군 간부들의 전투능력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넷째,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확립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군인은 오직 강병을 위해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19.09.30]

[논문심사일 : 2019.10.15]

[논문수정일 : 2019.10.31]

[게재확정일 : 2020.03.03]

참 고 문 헌

1. 1차 사료

『간이집』, 『기재사초』, 『난중잡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손자병법』, 『송천유집』, 『신증동국여지승람』, 『일성록』, 『징비록』, 『회남자』.

2. 단행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무경칠서』, 서울 ;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무신수지』, 서울 : 교학사, 19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전기법』, 서울 : 유풍인쇄주식회사, 19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서울 :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7.
이형석, 『임진전란사』, 서울 : 신현실사, 1975.

3. 논문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전투에 대한 재고”, 『사총』89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6.
김원갑, “孔자의 道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장준호, “류성룡의 『징비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지종상, “손자병법의 구조와 체계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4. 인터넷 검색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D%B4%EA%B4%91%E6%9D%8E%E6%B4%B8>(검색일 : 2019.08.2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4161&cid=40942&categoryId=33383>(검색일 : 2119.08.2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14162&cid=51887&categoryId=53574>(검색일 : 2019.08.30.)

Abstract

The Combat Capabilities of Lee Kwang Who Was crushing defeat at the Yongin Batt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Centered on the five assertions of Sun Tzu's Art of War-

Lee Yeong-seok

On the 14th of April, 1592, most high ranking officials ran away without a fight when the Japanese army arrived at Busan and King Seonjo also had to leave the capital on April 30th. The Japanese forces rapidly and easily conquered the capital of the Choseon Dynasty on May 3rd. Lee Kwang, who wa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of Cheolla province gathered soldiers and went north to win back the capital and fought Wakijaka Yasuharu(脇坂安治), the Japanese general around Bukdumun mountain, Munso mountain and Gwanggyo mountain in Yongin but suffered a crushing defeat.

The situation is now abruptly chang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y the commander Lee Kwang had great losses in his fight.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failures of his leadership based on the five necessities to win a war in the Art of War.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fication(道), Lee actively put Tao into practice. Secondly, when it comes to weather conditions(天), utilizing the critical time to win a fight with enemy is absolutely crucial, but he failed to do so, and neither did he consider weather conditions such as fog, and his reckless attack brought about a devastating calamity. Thirdly, from the aspect of environment(地), he failed to use lands and mountains and furthermore, did not accept

reasonable suggestions from his subordinates. Fourthly, from the viewpoint of the military management(將), Lee was little aware of military tactics or strategies because he was originally not a general. He denied any rational propositions from his commanders who had more field experience. Fifthly, concerning law and rule(法), his subordinates asked for an efficient unit organization to win the battle but he did not grant this request. In summary, his self-righteous leadership brought about great losses in the Yongin battle.

Key Words: Art of War, five assertions, Yongin battle, Lee Kwang, Wakijaka Yasuharu(脇坂安治).

북핵 대응전략의 평가 및 전망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on
Respon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박상중(Park, SangJung) *
최준혁(Choi, Joon-hyouck) **

- I. 상황평가와 문제제기
 - II. 북한의 핵개발 논리 및 협상전략
 - III. 국가별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
 - IV. 북핵 대응전략의 발전방안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e-mail: nicegift701@kndu.ac.kr

** 육군중령, 합동군사대학 합동고급과정, e-mail: gen9907@naver.com

논문요약

2019년 제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북 간 강대강 구도로의 회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개 정부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북핵 전문가들은 ‘핵 있는 평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필요충분한 핵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공산화뿐만 아니라 체제생존과 만일에 경우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6·25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5년 간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다양한 북핵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의지에 대한 과소평가, 북핵 문제의 본질과 방법론의 괴리, 북한과 협상 당사자들의 관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또한 미·중의 북핵 정책도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는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중국의 제재 우회는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동기와 실질적인 핵능력의 확보, 과거 규범적이고 당위론적 명분론에 입각한 북핵 대응의 실패,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의 한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쇄(offset) 개념의 북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핵에 대한 상쇄전략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지불을 강요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북핵, 대북제재, 한미동맹, 비핵화, 협상, 상쇄전략

한반도 안보상황이 다시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제1, 2차 미북정상 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던 비핵화 협상은 작년 6월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으로 재개되는 듯 하다가 10월의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로는 미북 간 강대강 구도로의 회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작년 5월부터 연이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다행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격동의 무대가 경쟁과 갈등의 확대보다는 여전히 협력·평화·안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제1차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핵무기의 운반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에도 2019년 12월 동창리 엔진시험을 감행하는 등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부른 장밋빛 전망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는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이란 제목의 저서를 통해 모든 북한의 행보가 ‘핵질주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²⁾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남북 핵협상을 시작한 이후 25년간 7개 정부에 걸쳐 다양한 북핵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

1) 김홍규, “북미 정상회담, 격변의 국제정세, 문재인 정부의 과제”, 『북한경제리뷰』 제20권 5호(2018), p. 16.

2) 정승욱, “핵실험·세습통치…‘北 심장부’를 해부하다,” 『세계일보』, 2018. 5. 19,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8003253> (검색일: 2020. 1. 22.)

구하고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인식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북한 비핵화 협상도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미·중 간 북핵 공조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능력 증강이 곧 더 큰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자체판단으로 핵무기체계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대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였다. 최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긴 하였으나, 핵·미사일 고도화와 끊이지 않는 도발 등 화전양면 전술을 고려해 볼 때 지난 정부의 비핵화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북핵’의 논리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비대칭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핵 있는 평화’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개발 논리와 협상전략을 살펴보고 각 국가별 북핵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

II. 북한의 핵개발 논리

1. 핵개발 논리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공산화, 북한의 체제보장, 미국의 위협대비 등을 위해 핵개발을 변함없이 추진해 왔다. 또한 북한은 오로지 핵능력만이 미국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었다.³⁾ 6·25전쟁 당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고,

3) 안문석, “북핵문제의 논리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억지,” 『프레스리안』, 2018. 5.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5025> (검색일: 2020. 1. 22.)

정전 이후에도 북한이 공격훈련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에 집착해 왔다.

현재 북한은 이미 60여 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ICBM과 수소폭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능력이야말로 미국의 핵 공격을 가장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화성-15호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핵보유 정책이 크게 잘못된 판단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00여 기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한반도와 주변 군사목표들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동맹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고, 핵 공격과 기습전을

4)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폭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해 최초의 핵사찰을 실시하였는데, 플루토늄 양의 불일치로 특별사찰을 요구 받은 북한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전쟁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양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전반적인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서 내용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 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1년 뉴욕에서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이 일어나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했고,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결국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파기를 선언했고, 2002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을 결정하였다. 네이버(terms.naver.com/entry.nhn?docId=1231631&cid=40942&categoryId=31734), “제네바합의,” (검색일 : 2020. 1. 22.)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⁵⁾

결국 북한은 한미동맹에 대해 전반적인 열세를 만회하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생존은 곧 북한 지도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개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확보는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동기를 더욱 강화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협상전략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이 큰 진전을 이룩함에 따라 북핵 완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지연시킬 수 있는 협상은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은 협상 회피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체계를 완성하여 대내·외적으로 핵 억제력을 과시하고 핵 협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와 정권 유지를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협상행태는 북핵 협상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송중환 경남대 교수는 1970년대 남북대화에서 참가한 경험을 분석하여 북한의 협상행태를 ① 원칙에 합의하기 ② 합의 재해석 ③ 대화 결렬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의 세 단계로 기술하였다.⁶⁾

이러한 북한의 협상 패턴은 1970년대에 진행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 및 적십자 회담에서도 입증되었고, 이후 무수한 회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협상은 1991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본국 철수 선언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5) 최우선,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한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50호, 2017), p. 3.

6) Song Jong Hwan, “How the North Korean Communists Negotiate: A Case Study of the South-North Korean Dialogue of the Early 1970s”, *Korea and World Affairs*, vol.8 no.3, 1984, p. 634.

7) 척 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1), p. 268.

서' 채택 이후에 시작되었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구사한 초기의 협상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양보의 강요, 협상의제의 세분화와 의제의 조각들을 활용한 협상이의 극대화, 의제의 조작과 협상주도권 확보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⁸⁾ 북한의 협상행태는 2000년대 들어 진행된 북핵 6자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최근 한반도 대화국면의 교착상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 현 상황에서도 북한의 협상전략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작년 말에도 북한은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 '새로운 길' 등의 수사적 표현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변함없이 구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가 제안하고 있는 일괄타결과 같은 해법을 회피하면서 체제보장을 포함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 해법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북한의 협상행태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최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강경기조와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협상 회피라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I. 국가별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

1. 한국의 북핵 정책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영변 핵 시설이 잡히면서 북한의 핵개발 정후가 최초로 포착된 이래 북핵문제는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한국은 7개 정부에 걸쳐 다양한 북핵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등 보수정부에서는 '선 북핵폐기 후 남북협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한 반면에, 김대중·노무현 진보정부는 햇볕정책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였다. 지난 정부의 북핵 정책의 특징과 성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8)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 박영사, 2005), p. 45.

<표 1> 과거 정부의 북핵 정책 특징과 평가

정 부	북핵 정책 특징	평 가
노태우 (1988 ~1992)	남북 기본합의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91.12) 합의	공산권 붕괴로 인한 대북 우월적 지위를 남북관계 개선에 이용, 그러나 비핵화 활용에는 실패
김영삼 (1993 ~1997)	북한 NPT 탈퇴 선언, 1차 북핵 위기 발생('93.3) 제네바합의('94) 이후 북핵문제 관리 국면 진입	김일성 사망, 조문 파동으로 남북 정상회담 및 관계 개선 기회 상실 외교안보팀의 준비·지식 부족 및 내부 이견으로 반응 위주의 혼선된 북핵 정책 추진
김대중 (1998 ~2003)	북한의 핵협상 카드로(안보 위협 해소 시 핵 포기 판단) 인식 남북관계, 미북관계, 비핵화의 불균등 진전 햇볕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발생	제네바합의('94)로 북핵 부담 없이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가능 김대중 정부의 '북핵 협상카드론', "북핵은 미북 간 문제" 판단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 진전으로 전환할 기회 상실
노무현 (2003 ~2007)	부시 정부, 농축핵 의혹 이후 제네바합의 폐기로 북핵 위기 재연 북한, NPT 탈퇴 선언, Pu 공개('04.1), 1차 핵실험('06.10) 등 본격 핵개발 북한, 6자회담 참여로 핵개발과 핵협상 병행	9·11 테러 여파로 미국의 강경책 선회('01) 노무현 정부, "북 핵개발 주장 일리 있다('04)", 종전선언 발언 등 한미 갈등으로 북핵외교 공간 위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 국내 안보세력의 반발로 남북관계 진전 한계
이명박 (2008 ~2012)	북한, 김정일 뇌졸중('08)으로 위기의식 고조 및 핵개발 가속화 중국, 공세외교, 북중관계 긴밀화로 대북제재 무력화 한국, 전략적 인내의 소극적 북핵 정책	대북정책에 낮은 관심 및 한미동맹 강화에 외교력 집중 한·미 '전략적 인내' 속, 북한 핵능력 증가(시간 벌기) 결과 초래, 북한 내구성, 핵능력·의지 과소평가 오류
박근혜 (2013 ~2017)	김정은('12~)의 핵무장 가속화 한·미, UNSC 제재 결의 강력 집행,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전략적 인내 기조 유지	북한 붕괴론으로 핵협상·남북경협 무용론 만연 코리아 포플라, 5자회담, 창의적 비핵화 방안 모색했으나, 4·5차 핵실험으로 무산

* 출처 : 전봉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5호, 2017, p. 5.

지난 25년 동안 각 정부의 북핵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
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과소평가와 한미공조가 미흡하였다. 과
거 미국 정부는 1994년 제네바합의 체결 당시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잘못된 평가에 근거하여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었고, 이후에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에게 핵 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한미 동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비핵화 전략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 논리구조상의 의지와 역량, 내구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간, 미북 간의 뿌리 깊은 적대감과 불신, 북한 정권과 지도부의 특수성 등은 통상적인 협상과 합의, 합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응정책들은 통상적인 비확산 대증요법과 북핵 일괄해결방안에 의존하였다.⁹⁾ 즉 북한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경시하고 이상적인 방안을 추구함으로써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미북 간의 신뢰수준과 북한 지도부의 특성, 북한의 핵개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증요법을 통한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은 사실상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원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전략적으로 협상 지연을 통한 핵·미사일 기술 완성이나 선 체제 보장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생존, 이념 충돌 등의 핵심요소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다. 그동안 각 정부별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대화, 설득, 경제지원, 신뢰구축 또는 북핵의 불법성과 비도덕성 부각 등의 방법론이 있었으나, 이는 규범적·경제적 접근에 그친 것으로 문제의 원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방법론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규범적·경제적 접근은 무의미하며, 보다 실효성 있고 대담한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개발에 집착해 온 북한에 대해 통상적인 비핵화 해법을 적용하였다. 한국은 비핵화 참조모델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어려운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남아공, 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쉬운 비핵화 사례를 참조한 것도 사실이

9) 전봉근(2017), p. 7.

다.10) 외국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외국의 비핵화 사례의 특징과 성공 요인

모 델	특징과 성공 요인
아르헨티나-브라질식 (1991)	탈 냉전기 민간정부 등장, 안보경쟁 중단으로 자발적 핵 개발 포기 상호 사찰 실시로 핵투명성 상호 보장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참조 모델
우크라이나식 (1994)	우크라이나, 구소련 붕괴로 핵무기 인수, 핵 포기 자세 경제 지원 및 안전보장 제공과 핵 포기 교환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94)의 참조 모델
리비아식 (2003)	영국 중재, 미국의 정권교체 불추구, 경제 지원과 관계 정상화 보상 약속 리비아의 핵 개발 기획단계, 미국의 제재 해제시 석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으로 핵 포기 용이
남아공식 (1991)	탈 냉전기 주변국의 안보위협 해소, 정권 교체로 자발적 핵 포기 유일한 핵 개발 이후 핵 포기 사례
파키스탄 인도식	사실상 핵국으로 북한의 핵무장 모델 NPT 비가입국으로서 NPT 탈퇴국인 북한과 차이
이란식	강력한 제재, 이란의 온건파 정권 등장, 미-이란 최고위 대화 채널, 개방경제, 유럽의 협상파트너로서 신뢰 획득 등 이란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과 일부 농축능력 인정
한반도식	북한, 핵무장 의지 과시, 유일 NPT 탈퇴국, 핵 개발 완성 한반도 특유의 환경 고려(분단, 미중 경쟁, 체제 경쟁, 일인독재 등) 다 비핵화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핵심요소 추출 및 결합

* 출처 : 전봉근, “이전 각 정부의 북핵정책 특징과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5호, 2017, p. 7.

북한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확산방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 밖 핵보유국이나 ‘사실상 핵국’으로서 핵안보정상회의(NSS, Nuclear Security Summit)와 같은 국제 비확산 레짐과 원자력협정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불량 핵확산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비핵화 전략은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룩한 우크라이나와 강압적인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이룩한 리비아 등의 사례와 함께 인도·파키스탄의 사례 등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전봉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5호, 2017, p. 6.

2. 유엔 및 미국의 북핵 정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북제재 결의안을 미국 주도로 채택해 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대북제재를 부과하였으며,¹¹⁾ 제재 결의가 거듭될수록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결의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 2375호, 2397호)의 주요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2375·2397호 주요 내용

- 개인/조직 제재 : 핵 개발과 관련된 26명의 개인과 8개 단체(기업/은행)의 자산 동결
 - 결의 2371호는 9명의 개인과 4개 단체, 결의 2375호는 1명의 개인과 3개 단체, 결의 2397호는 10명의 개인과 1개 단체
 -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직지도부 포함
- 무기금수 :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 장비 및 기술, 이중용도 물품의 거래 금지
- 상품 제재 : 북한산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석탄, 철광, 납, 동상, 수산물, 섬유의 대외 수출 금지, 북한으로의 금속류, 사치품과 석유 수출 금지
 - 정유제품 공급 한도 50만 배럴로 제한(ICBM 추가 발사 시 정유와 원유를 아우르는 유류 제한조치 추가, 일명 ‘트리거’ 조항)
 - 원유 공급량 연 400만 배럴로 제한(유엔회원국의 대북 원유공급량 보고 의무화)
- 운송 제재 : 금지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선박 등록 국가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수색, 북한 선박이 수색을 거부할 경우 선박 등록 국가는 등록을 취소
- 금융 제재 :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외국인의 기존 투자 확대 및 신규 투자 금지
- 이주 노동 제재 : 북한 노동력의 신규 해외 송출 금지,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11)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2397호(2017년) 등 10차례임.

북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 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유류공급량이 약 30% 감축되고, 특히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자금 유입 차단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²⁾

2017년 9월 11일 유엔의 제재 결의안 2375호가 통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0일 과거의 대북제재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13466 · 13551 · 13570 · 13687 · 13722호)을 확대 · 강화시킨 새로운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 주요 내용

- 미국에 존재하거나 미국을 경유하는 북한의 건설, 에너지, IT, 금융, 제조, 운송, 수산, 섬유 등의 기업 경영에 관계된 개인과 정부 관료의 자산 동결
- 북한에 착륙하거나 입항한 적이 있는 외국 항공기와 선박은 180일 내에 미국 공항 착륙 또는 항구 입항 불가
- 미국의 금융기관과 미국에 설립된 외국 금융기관은 대북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및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 체제로의 접속 차단
- 북한에 제공되는 인도적 목적의 기부에 대한 제한 부과 및 북한으로부터의 이민 불허

이러한 제재는 미국이 북한과 재화 · 용역을 거래하는 개인 ·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 겨냥한 조치이다. 또한 미국이 중 · 러를 겨냥해 제재 위반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에 부과된 유엔 제재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 대상국의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성은 30%를 넘지 못한다는 평가결과에 기인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이 효과성이 저조한 것은

12) 김토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 · 섬유수출 전면금지(종합)”, 『연합뉴스』, 2017. 9. 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010500072.HTML?input=1195m> (검색일: 2020. 1. 22.)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과 제3국의 제재 우회(evasion)로 인한 요인이 상당하다.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제재 이행을 기피하거나,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재 이행에 필요한 금융 기술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제3국의 존재는 제재 우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¹⁴⁾, 대북제재에 있어서 북·중 관계와 그로 인한 제재 우회는 제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무역 보복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지렛대로 국제사회를 압박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실례로 유엔제재 결의안 2371, 2375호에서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수색할 수 있게 한 조치는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¹⁵⁾’에 반대해 왔던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¹⁶⁾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기조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옵션까지 망라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북한 지도부의 전통적 가정을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⁷⁾

미국은 핵 비확산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유엔 제재 결의 내지는 독자적으로 제재해 왔으며, 실례로 미국은 2007년 북한에 금융 제재를 부과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경험도 있다.¹⁸⁾ 이에 따라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

13) 1990~2012년 사이에 부과된 22개의 유엔 제재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기초로 한 것이다.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 *Effectiveness of UN Targeted Sanctions(November 2013)*(Providence: Watson Institute, 2013), pp. 7-8.

14) 강선주(2017), p. 3.

15) PSI는 2003년 미국 주도로 도입된 제제조치로 2009년의 유엔 제재 결의 1874호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16) 강선주(2017), p. 2.

17) 최우선(2017), p. 4.

18) 2005년 6자회담의 결과인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지연되자, 미국은 중국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를 ‘자금세탁’ 은행으로 지정하고, BDA에 입금된 약 24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이 국제 금융망을 통해 이동하

의 행동 변화를 강요할 수 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은 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통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 2017년 한미 당국은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무력시위와 훈련 목적으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고 폭격기,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북한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워싱턴포스트(WP)는 2017년 11월 28일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대북 군사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워싱턴에서 대북 군사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응조치 중 군사옵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7년 12월 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능력 과시와 전쟁위기설에도 트럼프의 최대 압박에 아직 군사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전쟁계획은 통상 최소 1~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고 한·미 합동작전이 필요하므로 전쟁 위기설은 과장된 것”이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2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이 있고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여부를 떠나 과거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는 것을 차단하였다. 결국, 2007년 1월 북한은 BDA 제재 해제 조건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에 합의하였다. 강선주,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고찰”, 『IFANS FOCUS』, 2017-24K호, 2017, p. 2.

19) 국기연, “‘군사옵션 카드’ 만지작...트럼프, 결단의 순간 맞아”, 『세계일보』, 2017. 11. 29,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9005709> (검색일: 2020. 1. 23.)

전개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더라도 군사적 조치는 그 효과성 측면에서 분명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 제재는 시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가시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와 통합된 균형된 대응이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중국의 북핵 정책

대북제재와 압박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중국의 제재 우회와 견제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은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인식차로 인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은 비핵화 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의 쌍궤론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쌍중단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한·미·일 3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진영 간 전략적 협력의 어려움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대응에서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와 이와 따른 상호 비방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의 협력공간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대북제재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사활적 완충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원유 수출 중단이나 무역 금지 등과 같이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는 수준의 대북제재의 실행은 계속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핵 확산과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이 여전히 관리 가능하고 북한 체제 붕괴의 위험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⁰⁾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 유지를 위한

20) 최우선(2017), p. 6.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의 북핵 정책 기조는 그동안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IV. 북핵 대응전략의 발전방안

1. 상쇄(offset) 개념의 도입

앞서 북한의 핵개발 논리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핵 억제력 확보 추구하고 핵보유국 정체성 정착의 동기는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핵개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현시점에서 북한 비핵화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 헌법 서문에서 “(김정일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여, 핵보유의 합법화, 핵무력의 확대 강화,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을 최고 수준의 국가정책으로 선언하고,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동 병진노선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 정체성을 정착시키면서, 질박한 체제위기를 해소하고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 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외부의 압박과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한국의 북핵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의지에 대한 과소평가, 북한과 협상 당사자들의 관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미흡, 북핵 문제의 본질과 방법론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북핵 정책들은 위협에 대한 단일한 인식에 기초하고 규범적이고 당위론적 명분론에 입각한 처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개념에서 탈피하여 북핵 위협의 실체를 냉철히 인식한 가운데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미·중의 북핵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제재 우회는 제재라는 방법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북핵 대응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요컨대, 북한의 강한 핵개발 동기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불리해진 환경, 규범적이고 당위론적 명분론에 입각한 북핵 대응의 반성 그리고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보다 유리한 대북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상쇄(offset)’의 개념이 북핵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상쇄(offset)는 군사적 경쟁에서 불리점을 보완하는 비대칭적인 수단들을 의미하는데, 상대와 비우호적인 경쟁에서 대결하기보다는 경쟁을 보다 우호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상대가 이길 수 없거나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²¹⁾ 상쇄전략은 이점이 없는 경쟁을 보다 유리한 경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잠재적인 적에 대해 장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점의 유지를 추구하는 경쟁적인 유형의 전략이다.

신범철은 현 북핵 상황에서 상쇄전략에 기반한 접근이 새롭고 유리한 정책적 대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²²⁾ 첫째 북핵 문제를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고, 둘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스스로의 외교·군사적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상쇄전략을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북핵 대응전략의 추가적인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21) An offset is some means of asymmetrically compensating for a disadvantage, particularly in a military competition. Rather than match an opponent in an unfavorable competition, changing the competition to more favorable footing enables the application of strengths to a problem that is otherwise either unwinnable or winnable only at unacceptable cost. 구글(en.wikipedia.org/wiki/Offset_strategy), “offset strategy” (검색일: 2020. 1. 23.)

22) 신범철,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9호, 2017, p. 3.

2. 미국의 북핵 상쇄전략의 교훈 도출

미국은 일찍부터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상쇄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혁신을 근간으로 작전개념과 군조직을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²³⁾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상쇄전략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 감행 시에는 막대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쇄전략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초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New Look’ 정책과 1970년대 중반 브라운 국방장관의 ‘offset strategy’, 2010년대 중반 헤이글 국방장관의 ‘third offset strategy’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다.

<표 5> 미국의 상쇄전략 주요 내용

구 분	제1차 상쇄전략	제2차 상쇄전략	제3차 상쇄전략
시 기	1950년대 (New Look Strategy)	1970년대 (Assault Breaker Program)	현재
대 상	소 련	소 련	고능력 적(중·러)에 집중, 다양한 적을 상정
중 점	전략핵무기	정밀타격무기	로봇공학+무인화+AI
핵심기술	핵의 소형화	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스, 정보기술, 신 센서, 스텔스	AI, 로봇, 인간과 기계의 협업, 에너지무기, 사이버, 센서
작전개념	대량보복	효율적인 전력투사를 통한 공지전	개량, 생존성 개선, 효율적인 협력, 사이버를 통한 JAM-GC ²⁴⁾
기술개발 방법	DoD 자체 개발	DoD 자체 개발	민간 산업기술의 적극 도입

* 출처 : 박상현·신범철·백민정·권보람, 『아태재균형정책 이후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 71.

23) 신범철(2017), p. 4.

24) 미국이 기존 전략개념인 ‘공해전투(Air-Sea Battle Concept)’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한 개념으로,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이다. 네이버(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50723&bbs_id=BBSMSTR_00000000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0년대에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력을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비용이 대규모로 증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억제를 역설하였던 것이고, 이는 포드, 카터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상쇄전략’이라는 별칭으로 개발되었다. 이 둘은 모두 재래식 전력의 양적 열세를 상쇄시키기 위한 기술적 우세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전략 및 예산평가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에서는 1·2차 상쇄전략의 교훈을 <표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⁵⁾

<표 6> 미국의 1·2차 상쇄전략의 교훈

- 미국이 처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균형 있는 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핵, 재래식 등 포괄적 위협 인식)
-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보복만이 아닌 유연한 대응 병행
- 국가 안보이익 실현을 위한 비밀작전의 신중한 활용 필요성 강조
- 기술적 우위의 활용을 통한 전략적 우위의 확보, 유리한 환경의 조성
-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비첨단 수단의 적절한 유지(high low mix)
- 전략의 지속성 유지와 정부 기관별 임무 명확화

2014년 11월 15일 레이건 국방포럼(Reagan Defense Forum)에서 국방 혁신구상(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으로서 당시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 의해 제기된 제3차 상쇄전략은 미국의 힘을 중국의 A2/AD체계에 투사할 때 미군이 직면하는 점점 커지고 있는 불리점을 상쇄하기 위해 기술과 전투 영역에서의 미국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의 상쇄전략은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한 경쟁국과의 우위 확보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²⁶⁾ 상쇄전

1111&parent_no=1), “JAM-GC” (검색일: 2020. 1. 23.)

25)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pp. 5-21.

26) 박휘락,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2015년 4권 1호, 2015, p. 10.

략의 지향점으로는 미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 경쟁국의 전력투사 시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핵과 재래식 전력 모두에서 확고한 우위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주요 개발 전력으로는 경쟁국의 A2/AD와 정밀타격 능력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타격무기와 공중전 무기의 개량과 신 무기개발, 가성비 높은 작전능력과 작전지역 방어능력 개발, 잠수함과 해저 능력의 개선,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사이버와 전자무기 개선, 신 작전개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상쇄전략은 결과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오늘날의 미군을 만들었다. 그 핵심 결과물이 E-2와 E-3에 탑재된 공중조기경보통제 시스템, F-117 스텔스전투기와 그 후속 모델들, 첨단 정밀유도무기탄약 그리고 GPS, 정찰·통신·전장관리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진전들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상쇄전략 발전과정과 교훈 분석을 통해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상쇄전략의 대상 측면에서 당시의 소련과 현재의 북한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1, 2차 상쇄전략의 교훈을 현재의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작전개념과 핵심기술 등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론을 3차 상쇄전략의 교훈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

3. 상쇄전략을 적용한 북핵 대응전략의 발전방안

상쇄전략의 개념을 도입한 북핵 대응전략은 경쟁을 보다 우호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과,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북 비대칭전력의 극대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앞서 살펴본 미국의 1·2차 상쇄전략의 교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 구현을 위한 우리의 역량 즉, 북한에 대해 한국이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는 영역에는 한미동맹, 한국의 국제적 지위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 등이 있고,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우위는 이러한 역량들을 보다 강화하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전략개념의 구현을 통

27) 신범철(2017), p. 5.

해 상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핵무기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변환경의 조성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추동력을 유지한 가운데, 우리가 북한에 대비하여 비대칭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국제적 지위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그 어떤 영역보다 북한에 대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정치,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우위까지도 확고히 할 수 있다. 즉,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전략적 우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북한이 끊임 없이 한미동맹의 와해를 시도하고 한미연합 군사활동에 대해 비난하며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오폭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북한이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온 원인 중 하나로 한미동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맹이 공동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북한과 북핵의 위협에 대하여 상이한 인식과 정책옵션을 가짐으로써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²⁹⁾ 한미동맹 없이는 북핵 억제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한미가 원활한 소통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동의 정책옵션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철저히 국가이익에 근거한 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동맹 현안들을 조기에, 적절히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 또한 북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북한의 핵개발 추구와 내부적인 인권 유린 등으로 인해 그 비대칭은 더욱

28)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현대북한연구』, 19권 2호, 2016, p. 106.

29) 손한별, “북한의 핵위기 조성파 한미동맹의 대응”, 『전략연구』, 제67호, 2015, p. 71.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외교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외교적 역량과 지위를 구축하는 것도 북핵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자국의 핵심이익을 위한 각국의 입장들로 인해 국제적인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 등 제재 우회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경제 협력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주변국들의 역할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나. 핵무기 사용 시 ‘대가 극대화’를 위한 역량 강화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사력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군사력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비대칭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에 따른 대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인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무기의 우위를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가 전력화된다면 북한의 핵능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상전략의 측면에서 다양한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³⁰⁾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해 군사력 증강의 중점을 북핵 대응력 확보로 전환하여 3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핵이 사용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³¹⁾ 따라서 현 상황이 고려된 전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첨단 군사력 건설의 로드맵이 면밀하게 구상되어야 한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상쇄전략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에서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작동을 전제로 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

30)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가용한 최선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측은 당연히 협상에서 유리하고, 이것이 없는 측은 그 반대일 수밖에 없다. 윤홍근·박상현, 『협상게임: 이론과 실행전략』(서울: 인간사랑, 2010), pp. 16-17.

31) 박휘락, “우리 정부 대북협상전략의 내용과 방향: 비핵화를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18권 제1호, 2018, pp. 40-41.

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핵우산 제공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핵우산 외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억제력을 위한 다양한 옵션의 발전과 실행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와 주변국의 우려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의 중요성을 고려 경제·외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국제정치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상호 결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한 면으로 전이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2018~2019년에 걸쳐 조성된 남북한 정상간의 대화와 미북 정상간의 회담 등 한반도의 대화국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방법의 이견, 미북대화의 단절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 등은 급변하는 안보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신년사로부터 한반도의 대화국면이 진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북한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공동선언 등 일련의 국가정상들 간의 직접대화 노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가시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선 제재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와 남북교류는 병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안의 진전을 위한 문제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하고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과거 북핵에 대한 대응전략은 북한 위협과 체제 내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국내·외적인 정책 옵션의 문제, 제재 우회 등의 주변국 문제 등으로 그 한계에 부딪힌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가시적인 핵능력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협상의 전략적 우위를 다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해 규범적이고 당위론적 명분론에 입각한 북핵의 일괄타결 등 비현실적인 대응전략보다는 그 우위를 상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하여 더욱 유리한 대북 협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는 한미동맹, 한국의 국제적 지위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 등의 역량들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형성을 위한 대북 비대칭전력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상쇄전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0.02.06]

[논문심사일 : 2020.02.19]

[논문수정일 : 2020.03.03]

[게재확정일 : 2020.03.06]

참고문헌

1. 저서

- 박상현·신범철·백민정·권보람, 『아태재균형정책 이후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 윤홍근·박상현, 『협상게임: 이론과 실행전략』, 서울: 인간사랑, 2010.
- 척 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5.
-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 *Effectiveness of UN Targeted Sanctions(November 2013)*, Providence: Watson Institute, 2013.

2. 논문

- 강선주,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고찰”, 『IFANS FOCUS』, 2017-24K호, 2017.
-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 『현대북한연구』, 19권 2호, 2016.
- 김홍규, “정상회담, 격변의 국제정세, 문재인 정부의 과제”, 『북한경제리뷰』, 20권 5호, 2018.
- 박휘락,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2015년 4권 1호, 2015.
- , “우리 정부 대북협상전략의 내용과 방향: 비핵화를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18권 제1호, 2018.
- 손한별, “북한의 핵위기 조성과 한미동맹의 대응”, 『전략연구』, 제67호, 2015.
- 신범철,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9호, 2017.
- 전봉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5호, 2017.
- 최우선,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한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50호, 2017.

Song Jong Hwan, “How the North Korean Communists Negotiate: A Case Study of the South-North Korean Dialogue of the Early 1970s”, *Korea and World Affairs*, vol.8 no.3, 1984.

3. 기타 자료

- 국기연, “군사옵션 카드’ 만지작… 트럼프, 결단의 순간 맞아”, 『세계일보』, 2017. 11. 29.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9005709> (검색일: 2020. 1. 23.)
- 김토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종합)”, 『연합뉴스』, 2017. 9. 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0AKR20170912010500072.HTML?input=1195m> (검색일: 2020. 1. 22.)
- 안문석, “북핵문제의 논리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억지”, 『프레스리안』, 2018. 5. 1. <http://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5025> (검색일: 2020. 1. 22.)
- 정승욱, “핵실험·세습통치…‘北 심장부’를 해부하다”, 『세계일보』, 2018. 5. 19.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8003253> (검색일: 2020. 1. 22.)
- 구글(en.wikipedia.org/wiki/Offset_strategy), “offset strategy” (검색일: 2020. 1. 23.)
- 네이버(terms.naver.com/entry.nhn?docId=1231631&cid=40942&categoryId=31734), “제네바합의” (검색일: 2020. 1. 22.)
- 네이버(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50723&bbs_id=BBSMSTR_000000001111&parent_no=1), “JAM-GC” (검색일: 2020. 1. 23.)

Abstract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on Respon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ark, SangJung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Choi, Joon-hyouck

(ROK Army Lieutenant Colonel)

The deadlock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has been prolonged after the failure of the second United States - North Korea summit in 2019. Since the Stockholm negotiations broke down in October last year,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 Strong-to-strong confronta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s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sponse strategy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propose a development plan. South Korea has pursued various policies across the past seven governmen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espite these efforts, North Korea has not given up its nuclear program. In addition,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a 'nuclear-armed peace' among North Korean nuclear experts.

The purpo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the survival of the regime and to prepare for the military threats of the U.S. by securing necessary and sufficient nuclear capabilities. North Korea's perception about the U.S. threat began with the Korean War. For the past 25 years, South Korea has

been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rsue various North Korean nuclear policies. However, the South's efforts had such problems as underestimating the North's motives and willingnes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negotiating parties, and the gap in methodology. In addition, the U.S.-centered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shown that sanctions alone cannot fundamentally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ursu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with offset concept considering the North's strong motives and ability to secure practical capabilities, the failure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normative and general ways, and its limitations through sanctions on the North.

South Korea will be able to enhance effectiveness o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offset strategy by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North Korea cannot use nuclear weapons and demanding ruinous expenses if it does not give up the nuclear program.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OK-US Allianc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Offset Strategy

저자소개(가나다순)

▶ 김승택

현재 합참의장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합동 및 연합연습/훈련간에는 정치-군사(Pol-Mil) 통제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미국정책 과장을 역임하였다. 연구 관심분야는 한미 동맹관계, 전작권 전환 등이며 군사외교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 문근형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 석사학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논문은 “탈냉전이후 중국의 동북아 대외정책 연구”, 박사논문은 “국제군인스포츠 위원회(CISM) 활동과 군사적 역할 분석”이다. 재향군인회 학술지 제1호에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연구”, 제2호에 “북한 정세 급변시 주변국 개입가능성 연구”를 기고하였다.

▶ 박상중

현재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로 국가안보, 정책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부천대학교에서 국방외교, 협력안보, 리더십개발, 조직관리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등재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3회 수상하였다.

▶ 방호엽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로 활동 중이며, 경남대학원에서 정치외교 박사를 취득하였다. 국방대학교 전문연구원 및 국방TV고정패널로 활동하였고, 미래의 한반도 전쟁양상에 필요한 “비살상무기의 군사적 효용성분석 및 방향구상”에 대한 합참 실무간부 세미나와 합동군사연구지를 통해 미래 4세대 전쟁양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외래연구교수로 2017년부터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한반도 통일에 노력하고 있다.

▶ 이영석

한국의병연구소 소장과 충무공김시민장군연구소 소장 등의 직무를 수행 중이며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에서 군사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활발한 안보강의와 연구 활동으로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안보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 최준혁(박상중 제2저자)

현역 육군 중령으로, 합동군사대학 합동고급과정 학생장교이다. 국방부 북한정책관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윤리규정

□ 목적

향균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적용대상

향균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

□ 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균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부정행위 방지목적

이 규정은 향균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 원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음.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함.
-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적용.

□ 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

□ 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함.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됨.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제재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본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학술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편집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재심위원회 구성

-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과 동일함.
- 재심위원은 최초심의를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인원이어야 함.

□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공지의무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윤리소위는 이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함.

논문투고 및 심사/집필요령

□ 논문심사

1. 심사절차

가.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접수(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 활용

나. 논문 심사(3인) 의뢰 / 심사(2주)

* 제목 또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다.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판정

라. 심사결과 투고자 통보

바. 수정논문은 1주 이내에 수정 제출 / 접수

2. 심사기준

가. 내용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가 ① 외교 ② 국방 및 안보 ③ 통일정책

④ 향군 제도개선 분야 등에 관련된 주제

나. 내용의 창의성 :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

다.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

라. 향군 발전 및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향군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하거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마. 형식의 적절성 : 논문양식을 준수

바.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논문투고

1. 논문 투고자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한다. 단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원고집필요령’을 따라야 하며, 논문주제는 외교, 국방/안보, 통일정책, 향군 제도개선 분야로 한정한다.
3.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연구원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논문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6. 투고 논문은 연구원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7.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연구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학술지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예정일은 4월 8일과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로 하며 논문접수 마감일은 발행일 45일 전까지인 2월 25일과 8월 25일까지 수시접수 한다.

□ 확정 및 인쇄

1.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저자 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2.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의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게재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약 20매)로 한다. 최대 150매(A4 약 25매)를 넘지 않는다.

2. 용지여백 기준

가. 용지여백(A4 기준)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6mm	46mm	42.5mm	42.5mm	12.5mm	12.5mm	0mm

나. 본문 서체 : 글꼴 : 신명조 / 글자크기 12point(대제목 14point진하게, 중제목 12point 진하게) / 장평 100% / 자간 0% / 본문 글자크기 10.5point, 줄간격 160% / 첫줄 들여쓰기 10point

다. 각주 서체 : 신명조 / 글자크기 9point

3.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 1)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등) : 이중격쇠 『 』로 표기하고,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 last name 순서로 표기하고,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가)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서울 : 법문사, 1985), p. 120.

나)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2.

- 다)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 2) 논문 :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9-33.
- 나)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7, No1(1965), p. 627.
- 3) 학위논문 : 한글 학위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p. 25-26.
- 4)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 5)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 출판정보 등이 생략된 저자명을 표기한 후 인용페이지를 표기한다. 서양권 저자 이름은 last name 만 표기한다. 바로 위의 인용한 자료를 잇달아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p. 2.’, ‘ibid., p. 2.’로 표기한다
- 가) 황병무(2011), p. 300.
- 나) Nye(2013), p. 27. ibid., p. 90.
- 6) 인터넷 자료 : 웹주소의 검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가) <http://www.technorealism.org>(검색일 : 2019.2.12)
- 나) 국방부(<http://www.MND.go.kr>), “국방의 현주소”(검색일 : 2019.2.12)
-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 가) 황병무,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00일보』, 2003. 4. 19.
- 나) “안보의 현주소”『연합뉴스』, 2003. 4. 19.
-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한글문헌,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글 및 동양문헌은 저자의 성을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저자의 성(참

고문헌에는 last name을 맨앞에 표기하고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을 표기)를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이때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각주에서와는 달리 괄호 없이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4)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나.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다.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마. 논문 원고 순서는 ①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②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③ 원고지 5매 이내의 한글요약문과 3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④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게제시에는 별도로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투고 환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연간 2회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재향군인회와 안보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자료를 수록하기 위한 학술지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등재학술(후보)지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군회원과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보내실 곳 :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 : 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02-499-02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